제19대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수립활동

백 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KOREAN ADVANCED FARMERS FEDERATION

발 간 사

김 지 식 회장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지난 4. 13일, 우리는 백척간두 위기 상황에 놓인 우리 농업·농촌을 회생시켜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모아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함께 하였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날 행사에서 우리는 “농업인이 잘 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 한농연 10대 농정비전 60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250만 농업인의 염원과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5개 정당 농정책임자 토론회’와 ‘대선 후보 농업관 강연’을 통해 주요 정당의 핵심 농정공약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진정한 농민 지도부를 회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존경하는 한농연 회원 동지 여러분!

그 간 국가 경제정책의 하위 정책으로서 농정이 추진된 결과는 이루 말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기만 합니다.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할 정도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는 현실입니다. 첩첩산중으로 놓인 농업의 수 많은 난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한농연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앞장 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 출범을 맞아 우리는 그 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한농연 농정공약이 새 정부 정책에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농연 7대 핵심 농정공약”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 현장에 필요한 제반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한농연은 지난 4월 13일 개최된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주요 정당의 농정공약과 대통령 후보 연설 전문, 그 외 토론회 관련 제반 성과 및 한농연 농정공약 반영 여부 등을 집대성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수립활동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백서는 향후 새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농정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농정현안 대응 활동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되었으니 범농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3일,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과,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50만 농업인 여러분께, 14만 농업경영인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1장.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갖는 의미와 차기 정부의 농정 방향 1

2장.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농정공약 대토론회 경과 10

3장.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13

4장. 각 당 농정공약 및 한농연 대응활동 67

제 1 장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갖는 의미와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농정방향

□ "농업의 산업화" : 농업·농촌·농업인의 전대미문의 복합적 위기 상황[1)]

○ 이미 우리 농업·농촌은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완전 시장개방 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 UR 타결 20년, 한-칠레 FTA 비준 10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품목·축종간 분화, 농가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개방농정 기조 속에서 농업 부문의 성장 정체와 소득 하락 현상이 매우 심각하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 여기에 기후·환경·식품안전·에너지·자원 측면의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가 전체적으로도 생산가능인구 나아가 총인구의 정체·감소가 불가피한 속에서 저성장 시대로 돌입한 상황이다.

○ 이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과 농업인이 처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 농정연구센터 황수철 소장은 "근대화 패러다임, 글로벌화, 식품제국[2)]" 상호작용에서

1) 이 단락은 "생산주의농업에서 다기능농업으로-농업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아", 황수철, 계간 농정연구 제58호에서 제기된 논의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2) 식품제국(food empire)은 글로벌화 프로젝트로 거대 농식품 복합기업의 세계 지배체제가 형성되는 현상을 뜻한

찾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른바 "농업의 산업화[3)]" 현상이 가져온 총체적 폐단이라는 것이다.

- 이는 300만 농업인, 나아가 14만 한농연 회원(후계농업경영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까지 연결된다.

○ "농업의 산업화"의 양상과 그 파괴적 결과는 무엇인가?

- 우선, 농업 생산의 전방(가공·유통업)·후방(농자재산업 등)을 장악(포위)한 국내·외 거대 자본은 농업 생산부문에 직접 진출까지 시도함으로써, 지역·품목별 핵심 농업경영인(한농연 회원) 중심의 현행 농업생산구조를 붕괴시키고 "농업자본가-농업노동자(비숙련·단순 노동인력)"의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독과점적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여 자신의 이윤율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 경종·축산·원예·특작 등 농업 생산 전 부문에서 진행된 규모화, 전문화, 집약화(농업의 산업화)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와 농촌 공동체의 약화·붕괴 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 나아가 구제역·AI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확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성찰해야 할 것이다.

○ 전국의 농지와 농촌 공간은 행정복합도시(세종시)·혁신도시 건설 사업과 4대강 사업 등의 개발 광풍에 휩쓸려,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노린 부재지주의 손에 상당 부분 넘어간 상태다.

다. 여기서 언급되는 "제국"의 개념은, 네그리·하트의 공저 "제국(2001)"에서 참조한 것이다.

3) 식량작물, 청과(과실, 과채, 채소류 등), 축산, 특작을 망라한 농업 생산 전 분야에 있어, 농업인들은 자신의 농장을 소유하고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농업 생산 전·후방 분야를 실질적으로 "포위"하고 있는 국·내외 대자본의 이윤 극대화와 위험 최소화(자연 조건에 의해 풍흉이 좌우되는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을 제거)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 한국의 농업 산업화에 관한 연구 : 축산부문을 중심으로", 송인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참조

- 생산 공간인 농지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은 높은 지가와 임차료 부담에 허덕이고 있으며, 농촌 공간은 원칙 없는 난개발로 돌이킬 수 없도록 파괴되었다.
- 대다수의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은 농지와 농촌 공간을 주체적으로 관리·보호할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그 주도권을 부재지주와 국내·외 거대 자본에 빼앗긴지 오래다.

□ **아울러 300만 농업인들이 직면한 "2중의 고립"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고령화·과소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의료, 교통, 교육, 문화 등 기초적·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사회 서비스가 극도로 취약해지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농어촌 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첫 번째 고립)

○ 나아가 국가 기간산업이자 전략산업이며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이 정부와 정치권 등 비농업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농업예산의 편성·집행은 물론 농업·농촌정책과 관련한 정치사회적 "홀대"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두 번째 고립)

- 이는 곧 300만 농업인, 14만 한농연 회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산업적 시민권"[4]을

4) "산업적 시민권"은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제기한 개념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서 사회복지체제의 발전과 당위성을 이론화한 사회학자 T.H. 마샬은, 보편적 인권을 기초로 시민권 개념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사회가 경제 발전의 결과로 획득하게 되는 성과를 개인의 사회 경제적 생활을 위해 분배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권리로 발전해 왔다"고 말한다.
나아가 1980년대 초 사회학자 안소니 기든스는 "산업적 권리가 시민권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자들이 생산 부문의 작업 현장에서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사용자측과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노조가 노동자들의 권익과 의사를 대표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1970~80년대를 통하여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사회협력적인 "사회적 코포라티즘"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위의 개념을 응용·확장하여 농업·농촌 및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산업적 시민권"의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농업인의 자주적인 역량과 요구로 만들어진 농업인단체(결사체)가 농업인의 권익과 의사를 대변하고 ▲정부와 비농업계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고 농업·농촌정책 및 통상정책의 결정 과정에도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박근혜 정부 농정 4년에 대한 평가

○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논의·검토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5대 분야 100대 과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 "효율성에 기초한 창조, 소통, 배려의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화·규모화와 함께 첨단과학 기술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식량을 확보하고 수출농업을 지향하는 한편, 6차산업화를 촉진하여 농가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세 고령농을 배려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농정은 생명산업인 동시에 국민들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농업과 농촌이 가진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전제로 지역과 산업, 사람이 어우러지는 종합농정을 지향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지역과 농가의 유형별 맞춤형 농정, 정부 3.0과 자조·자립을 기반으로 하는 협업농정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5)]

○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농정 성과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못하다.

- 한농연이 2017년 3월 실시한 "19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요구사항 수립을 위한 설문

면서 동시에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농업·농촌이 지니는 중요성과 가치를 국가 전체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명시적·암묵적인 "사회협약(예 : 스위스 연방헌법 제104조에 명시된 상호준수의무 조항)" 혹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최장집의 '경제민주화 담론' 비판..."산업적 시민권을 요구하자"』, 2016년 12월 29일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 기고한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기고문을 참조·인용

5) 여기까지의 내용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머리말에서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2015. 10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 농정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7명(5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무려 91.4%가 불만족을 표시하였으며, 5점 만점 기준 1.55점으로 나타났다.

(본 자료집 내 첨부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의 세부 내용 참조)

○ 위에서 확인한 한농연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는 한국농어민신문 2016년 4월 12일자 보도 내용[6]과도 일맥상통한다.

- 당시 농업전문가 20인은 박근혜 농정 성과에 10점 만점에 6점을 매겼다.
- 그 이유로 ▲농업·농촌·농민의 중장기 비전이 없이 경쟁력 지상주의와 효율성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농정으로 일관했으며 농정 패러다임의 근본적 혁신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완전개방시대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영 안정,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소홀했다는 평가도 제기되었다.

○ 박근혜 정부가 6차산업화와 첨단과학 기술(스마트팜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소득 증대를 꾀했지만, 농가소득 및 생산(경영)비 부담 증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농업인들의 현실과는 완전히 괴리되어 있었다.

- 작년 여름 LG CNS의 새만금 간척지 스마트팜 파동으로 나타났듯이,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허용(기정사실화)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농업계의 날선 비판만을 초래하기도 했다.[7]

○ 농업의 6차산업화 방침 또한, 마을(공동체) 단위의 다양한 주체(여성, 농협 등)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경제 영역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역량이 부족한 귀농·귀촌인과 개별 생산자에 의존하는 형태로 변형되어 추진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8]

---

6) "[창간 36주년 특집] 농정 전문가 20인에 듣는다", 한국농어민신문 2016년 4월 12일자
7) "LG CNS 새만금사업 전격 철회 "한숨 돌렸지만…"-농업관련 핵심 규제 철폐 담은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 계류 중", 한국농어민신문 2016년 9월 27일자
8) "농업을 넘어 지역과 함께, 농촌경제의 새로운 틀을 짜자", 서정민, 지역재단 농정대연구 제1차 공개포럼 자료집,

□ 농업·농촌·농민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작년 말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본격화되어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 낸, 성난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개인의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 공동체를 회복·재건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끔 근본적으로 혁신시키는 일"일 것이다.

○ 이같은 시대정신을 충실히 반영하고, "농업의 산업화"로 초래된 농업·농촌·농민의 총체적 위기의 극복 방안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농업·농촌 및 300만 농업인에게 갖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살펴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지속돼 온 "경쟁력 지상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농정"을 반드시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지향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업인을 제대로 대접하는 농정"으로 근본적(Radical)으로 개편해야만 한다.

- 그 이유는 명백하다. ▲향후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의 정체·감소가 불가피할뿐더러 ▲이미 WTO·FTA로 농축산물 시장이 완전개방된 현 상황에서 ▲경제·사회·생태·환경 전반의 지속가능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기존의 농업성장 전략은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절대로 관철·성공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 14만 한농연 회원 나아가 300만 농업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산업적 기본권"을 제대

2016. 3. 25, p.92~93 참조

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담보하려면 최근 추진중인 헌법 개정 작업 시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국민·농업인 모두의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반영시켜야만 한다.

□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농업·농촌·농업인 부문의 3대 핵심 혁신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의 농업생산구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및 전후방 산업에서의 독과점적 영향력 확대를 막아야 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가족농 구조의 유지·발전을 담보할 수 있게끔 후계농업경영인 중심의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확립·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 둘째, 농업인들의 "자조와 연대"의 정신을 견고히 하여 "파괴된 농촌 환경과 공동체의 회복"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키 위한 정부와 국민(주로 도시 소비자·납세자), 농업인의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를 헌법 개정안은 물론 개별 법률에 명확히 하여 직불제를 포함한 다양한 농업·농촌 지원 정책이 확립·시행되게끔 해야 한다.
-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 스스로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농업(전후방 산업 포함)의 근본적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촌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보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를 통하여 300만 농업인이 ▲중앙·지역 단위의 농업정책은 물론 농촌(농지 및 농촌 자연 생태환경 포함)을 책임지는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셋째, 5천만 국민, 7천만 민족 전체가 농업·농촌 및 농업정책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국민농업" 나아가 "통일농업"을 지향해야 한다.

- 지금까지 농업계(농식품부, 농협, 농업인단체 등)에서 통용돼 온 "국민농업" 개념은, 농업예산의 증액과 농업·농촌정책의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민(주로 도시 소비자·납세자)"들을 "수동적 개체"로 "호명"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 이 속에서 "국민"은 스스로가 원하는 한국 농업·농촌의 역할과 미래 가치·중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한 채, 심화되는 청년 실업 및 경제 양극화 속에서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의 "수동적 소비자·납세자"로 소외되어 온 것이다.
- 앞으로의 "국민농업"은 ▲위와 같은 지난날의 과오를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생산자(농업인)과 소비자·납세자(도시민)가 공감·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농정 기조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지금까지 쌀을 포함한 각종 농자재, 관행농법 중심의 농업기술 일부 지원에 국한되었던 "통일농업"의 실천을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활동을 보다 다양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및 남북간 화해·협력 기조 확립을 전제로, ▲사료·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협력활동 ▲남북한 유전자원 공동조사·수집 활동 ▲북한 농업생산 및 전후방 산업 인프라의 복구·발전 방안 등을 국제사회와의 협력·공조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한농연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 한농연은 2017년 4월 13일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통하여, 농업·농촌의 현장 여건에 부합하며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농정공약을 철저히 검

증하고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 전국의 14만 한농연 회원 및 250만 농업인이 모이는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통하여, 유력 대선 후보들의 농업·농정관은 물론 각 정당의 농정공약을 비교·평가하고 한농연의 핵심 농정공약을 공론화하고 새로운 정부를 통해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고자 한다.

○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 인구 중 10% 이상을 차지하게 된 핵심 영농 세력인 한농연은, 우리 스스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생태환경적 모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편이 무엇인지를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 국면을 계기로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여 책임 있게 제시하고자 한다.

○ "변화의 새로운 방향과 근거는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삶터와 일터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갖고 한농연은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 2 장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경과

1. 토론회 준비 경과

❑ 핵심지도자 교육시 활동(3. 20～21)

○ 박근혜 정부 4년 농정 평가 설문조사 실시, 시도별 농정공약 요구사항 개발을 위한 분임토론 진행(3. 20)

○ 분임토론 결과 발표 및 공유 및 "한농연 10대 농정 비전, 60대 핵심 요구사항" 안내(3. 21)

❑ 한농연 1차 준비 지침(전통(정책)17-02, 2017. 3. 23 발송)

○ 토론회 개요 안내(일시, 장소, 주최·주관, 식순 등)
○ 시군구연합회별 버스 1대 이상, 총 5천명 이상 회원 동원
○ 읍면동회별 현수막 3개 이상 게시(문구는 중앙 지침을 참조)
○ "한농연 10대 농정 비전, 60대 핵심 요구사항" 안내

❑ 5당(중앙당, 정책위의장, 예비후보 캠프 등)에 참석 요청 공문 발송(한농연(정책)제17-08, 2017. 3. 27 발송)

○ 토론회 일시, 장소, 주최·주관 식순 등을 안내
○ "한농연 10대 농정 비전, 60대 핵심 요구사항" 안내
○ 핵심 7대 농정공약 및 해설 자료 첨부

❑ 토론회 관련 대내외 홍보 업무 추진 내용

- ○ 한농연 홈페이지 메인 배너 설치 및 주요이슈 게시
- ○ 한농연 트위터·페이스북을 통한 홍보 작업 진행
- ○ 초청장, 포스터 시안 작성 후 발주·발송
- ○ 국민농업포럼 등 관련 단체·기관을 통한 홍보 지원 요청

❑ 제1차 정책조사위원회 개최 (2017. 4. 6)

- ○ 참석 인원 : 중앙 및 시도정책부회장(총 9인)
- ○ 토론회 준비 상황 최종 점검, 60대 농정공약 최종 검토·수정, 토론회 당일 시도·시군구연합회 협조 요청 사항 등 논의

2. 한농연 제19대 대선 농정공약 개발 사업 경과

❑ 박근혜 정부 4년 농정 평가 설문조사 결과

- ○ 실시 기간 : 3월 20일(월)~21일(화)
- ○ 조사 대상 : 2017년 한농연 핵심지도자교육 참여 시도·시군구임원 및 일반 회원(총 103명 응답)
- ○ 설문조사 결과는 4.13 토론회 자료집에 게재

❑ "한농연 10대 농정 비전, 60대 핵심 요구사항" 개발

- ○ 농정공약 세부내용은 4.13 토론회 자료집에 게재

❑ 한농연의 핵심 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안)

- ○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인정
-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도입

-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 농업예산 확충,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 “식품안전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
- 사회보험 방식의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제도 도입

제 3 장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1. 한농연 7대 핵심 요구사항]

1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2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인정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

4 농업 · 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5 농업예산 확충,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6 "식품안전청" 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

7 사회보험 방식의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제도 도입

1)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대선공약 요구사항

○ 중장기적(20~30년)으로 벼(쌀) 재배 위주로 고착화된 논농업의 생산구조를 다양화하여 식량(곡물, 사료) 자급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실시해야 함(쌀 생산조정제 관련 법령의 별도 제정 포함)

- 총체벼, 옥수수 등의 사료 작물(한·육우, 낙농 분야 조사료용)과 녹비용 작물부터 신중히 시작하여, 국내산 수요(가정용, 식품가공용 등)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논콩·밀 등 식용 작물의 재배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함
- 단, 북한 급변사태 및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국내 논의 총 면적 및 재배 여력을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게끔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해야 함

○ 2016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중단하고, 쌀 농가들이 납득·수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함

- 197억 2천만원의 우선지급금 환수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미 수매에 응한 쌀 농가들이 납득·수용할 수 있는 특단의 소득보전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함
- 2016년도 쌀 변동직불금 미지급분과 관련해서도, 차기 연도분 감축대상 보조금액(AMS)를 활용하여 76억 9,200만원의 변동직불금 미지급분 또한 전액 농가에 지급(사후 보전)해야 함

제안 배경

○ 농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국회 농식품위가 쌀 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3만ha)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에서, 농식품부는 별도 예산 투입 없이 벼 재배 면적 축소를 추진중에 있음

- 지자체(광역, 기초)의 기존 벼(쌀) 생산장려성 예산을 벼 재배 면적 축소용으로

전용하고, 자연감소분(2만ha)에 농식품부 목표 면적(1만ha 내외)을 더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향후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임

- ▲기후 온난화와 벼 재배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총 재배 면적이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수확량(단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축소되는 재배 면적도 중산간지역 계단식 논 등 한계지가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목표대로 벼(쌀)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임

○ **논에서 사료용·녹비용 작물 및 잡곡 등의 재배가 다양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작물의 소득 수준을 최소한 벼(쌀) 재배시 예상되는 소득 수준 정도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함. 아울러 북한 내 급변 사태 및 향후 예상되는 남북통일 등의 변수를 감안하여, 당장 식용벼를 재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농업생산기반은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정부의 쌀 수급·가격안정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로 초래된 쌀 대란의 책임을 농업인에게 전가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됨**

- 2016년산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정부(40kg 벼 포대 당 45,000원)와 농협(RPC 조공법인 포함)의 낮은 우선지급금 책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작년도 정부가 수매한 쌀 68.9천톤(공공비축미 36만톤, 시장격리곡 29.9만톤, AFTERR 3만톤)은 같은 해 신곡 생산량 419.7만톤의 16.4%에 달했지만, 정부와 농협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쌀 농가 및 민간 도정업자의 불안 심리를 잡지 못해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이 초래된 것임
- 쌀 농가는 우선지급금을 받아서 부채 원리금 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이미 지출한 상태이며, 본격적인 파종기를 앞두고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이를 무시한 채 정부가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강행할 경우, ▲쌀 농가와 환수 실무를 맡은 지역농협·지자체와의 불필요한 마찰·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게 될 것임
- 통계청 조사 결과 2016년 10월~2017년 1월 평균 쌀값이 129,711원이므로 80kg 쌀 1가마 기준 변동직불금은 33,672원이 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감축대상 보조금액(AMS) 한도 1조 4,900억원을 적용할 경우 33,499원밖에 지급할 수 없으므로, 80kg 쌀 1가마 기준 173억원이 미지급되어 쌀 농가 전체로는 76억 9,200만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임
- 그러나 농식품부가 차기 연도 감축대상 보조금액(AMS) 한도를 활용해서라도 변동직불금 미지급분을 사후에라도 쌀 농가에 전액 보전할 수 있음에도 사태 해결에 미온적임

2) 국산 농축수산물·농식품을 적용 예외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대선공약 요구사항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하여, 국산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농식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로 해야 함

- 핵심 이해 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과일류·축산물·수산물·화훼류 등에 대해서는 일반 공산품 등과 달리 예외 품목으로 인정해야 함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한우·인삼·버섯류·과실류 등 고가 농축수산물(농식품)의 피해가 실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보완(지원) 대책 또한 조속히 마련·시행되어야 함

제안 배경

○ 작년 9월 28일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해, 설·추석 명절 선물용 소비 비중이 높은 농축수산물의 피해가 실제 나타나고 있음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화환·조화 포함)는 10만원으로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음
- 2017년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백화점 3사(신세계·롯데·현대) 및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의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17년 설 식품(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설 대비 14.4% 감소하였으며, 특히 국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2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탁금지법 시행후 농축산물 도매·산지거래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한우는 도축량이 감소(17년 1월 기준 전년 대비 7.1%)하면서도 수요 부진으로 가격도 하락(9.6%)한데다, 도매거래액은 16.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화훼의 경우 난 등 분화류 거래액은 18.5% 감소, 과일의 경우 사과·배 거래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2017. 2. 22)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실시

대선공약 요구사항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함

- 정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세부 내용(시행지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하위 법령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해야 함
-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농협 등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계획 수립·시행 책무를 부과하고 ▲예비·신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교육·훈련·멘토링 등의 육성·정착 지원 조항 ▲영농승계 혹은 신규창업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 방안(세제 혜택,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명시해야 함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를 도입·지원해야 함

- 지원 대상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지 5년 미만인 자
- 지원 방식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지정후 5년차 종료 시점까지 1인당 매년 1,500만원을 매월 급여 형태의 보조금으로 지원(매월 125만원 지급)
- 예산 소요 : 매년 최대 1,350억원(산출 근거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인원 1,800명 × 1,500만원 × 5년)

제안 배경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1981년 이후 2016년까지 총 14만명이 넘는 후계농업경영인(구 농어민후계자)이 지정되었으나, 이들의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은 1회성 정책자금 지원 프로

그램에 불과하여 체계적·종합적 지원·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과 관련 법 조항은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1980년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년대)에 이어 ▲현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돼 있음
- 그러나, 이들 법령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에 관한 선언적 문구로만 그치고 있으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 및 주요 정책 과제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나아가 헌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후계농업경영인"의 법적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은데다, 농업·농촌정책 상 "후계농업경영인"의 불명확한 지위 및 위상에 관련된 문제점 등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과제임

○ **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포함)이 자녀에게 경영승계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함**

- 한농연 회원 대상 인터뷰 및 다수의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와 함께 영농을 하면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부모로부터 영농사업의 일부를 할애받아 독립적 영농을 하거나, 부모의 영농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음
- 농업경영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품목(축종)별로 전문화·전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향후에는 자녀 세대의 농업경영 승계를 통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 실질적인 농업 진입 경로로 자리잡게 될 것임
- 이들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이 부모 세대의 은퇴 혹은 사망 이후에 부모가 성장시켜 온 영농 기반을 이어받아(농업경영 승계), 1차 농업생산은 물론 가공, 유통 등 6차산업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농업경영 승계를 고려중인 농가에게는 경영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농지를 비롯하여 농업생산 기반에 대한 증여 및 상속세 부담을 완화(과세특례)하는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 정착시까지 최대 애로 사항은 생활 자금 및 영농(운전) 자금의 부족에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농경연 "농업전망 2017**

참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소득 보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 과수·축산·특작의 경우 최초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뒤 최초의 수확물을 거둬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4~5년(인삼의 경우 한 사이클 당 6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생계를 꾸리고 영농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거나(현재 후계농에 대해서는 농외부문 취업 및 창업을 금지) 정부·지자체의 소득보조가 필요한 실정임
-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된 자에게 창업안정자금을 월 80만원 최대 2년간 지원(총 300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매년 1,800여명 이상 선발되는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 동일 세대 내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농하는 자 등이 제외되었음)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 지원 관련 해외 사례**

- 일본의 청년취농자금 지원금 제도 : 45세 이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의 총 7년 동안 급여 형태의 보조금(연간 150만엔, 우리나라 돈 1,600만원을 지원)을 지급하고 있음
- 프랑스의 영농정착 지원금 제도 : 18세~40세 미만의 청년영농정착지원 대상자에게 최소 4천유로(500만원, 평야지역, 겸업)~최대 35,900유로(4,487만원, 산악지역, 전업)을 지원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의 청년농업인 직불금 : 2015년부터 40세 미만으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5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회원국의 의무(강제)조항으로 결정하여 시행중이며, 국가별로 배정된 직불금 총액의 2%까지 지불할 수 있음

4)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하여 헌법 내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함

- 현행 제9차 개정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제121조(경자유전의 원칙)과 제123조(농어업의 보호·육성)에 반영된 농업·농촌 관련 조항을 대폭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농업인·국민간의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를 명확히 하게끔 헌법을 개정해야 함

○ 제10차 헌법 개정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조항은 아래와 같음

- 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농업예산 및 직불금 확대 편성 등)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농업인·국민간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 명시
- 5~10년 단위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기본계획) 수립·집행의 근거 마련(미국 농업법 체계를 참조)
-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원칙 강화, 농촌 공간의 활용 원칙 천명
- 지속가능한 가족농 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 통상협상과 관련한 농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및 의견 반영 의무화

제안 배경

○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비해 현행 헌법 내 관련 조항은 매우 부실함

- 1987년 공포·시행중인 현행 제9차 개정 헌법에는 "제9장 경제"의 제119조~제127조가 농업·농촌 부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며, 이 중에서 특히 제

121조(경자유전의 원칙)과 제123조(농어업의 보호·육성)은 직접 연관되는 것임. 아울러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 또한 농업·농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조항으로 판단됨

- 그런데 제123조(농어업의 보호·육성) 내 조항들은 ▲농업·농촌 관련 조항과 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혼재돼 있어, 이를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정부) 및 국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이 선진국의 사례(아래의 스위스 연방헌법 제104조 참조)와 비교했을 때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 올해 1월 5일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개특위)가 출범하여 1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안 검토에 돌입한 상태임
- 그런데 헌개특위가 구성·운영중인 자문위원단에는 한농연 등 농업계가 추천한 인사가 전혀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 제121조 제1항의 경자유전의 원칙마저 "농촌인구 감소 등 시대상황적 변화를 반영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헌법 개정시 반드시 감안·반영되어야 할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스위스 연방헌법 제104조(농업)**

- ① 연방은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며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보장한다.
  a. 국민에 대한 공급안보
  b. 천연자원의 보존 및 향토경관의 유지
  c. 지역 분산적인 인구분포
- ② 연방은 농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호지원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나 농민의 토지경작을 장려한다.
- ③ 연방은 농업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연방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a. 연방은 농민이 생태학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조건으로 농업

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한다.

b. 연방은 경제적으로 유익한 장려책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 및 가축의 생산을 장려한다.

c. 연방은 식료품의 원산지, 품질, 제조방법 및 가공공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d. 연방은 비료, 화학물질 및 기타 첨가물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를 예방한다.

e. 연방은 농업의 연구, 지도 및 교육을 장려하고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f. 연방은 농촌지역의 토지소유를 안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연방은 이를 위하여 특별 배정된 농업예산 및 연방의 일반 재원을 투자한다.

5) 농업예산 확충,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비중을 5%까지 확대해야 함

-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망 정비·확충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영위하기 위해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함

○ 농업예산 중 직불제 비중을 대폭 확대·추진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

-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2016년 기준 14% 수준에서 차기 대통령 임기 만료시까지 약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EU와 스위스 수준인 80%까지 인상시켜야 함

○ 쌀소득보전직불제 변동직불금을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벼 재배 여부와 상관없이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면, WTO 농업협정문 상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제도(Blue-Box)로 분류되어 변동직불금 지급 상한(현행 1조 4,900억원 AMS 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됨은 물론, 휴경 혹은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생김으로써, 벼(쌀) 과잉 생산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밭농업직불제의 경우, 고정직불금을 ha 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변동직불금(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지급하여 과잉 생산·출하를 억제)도 지급해야 함

-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자란(한-중 FTA 후속 대책 차원에서 2020년이 되어서야 ha 당 60만원 지급토록 결정) 밭농업직불제 고정직불금을 ha 당 100만원으로 균등하게 지급해야 함
- 밭농업직불제 변동직불금의 경우, 핵심 밭작물의 생산비와 연계시켜 5년 단위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 목표가격간의 차액을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하되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과 마찬가지로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밭작물의 과잉 생산·출하를 억제하는 효과를 도모해야 함

제안 배경

○ 전체 국가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대비 농업예산 증가율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직불금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 확보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국가 전체예산 및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예산액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국가전체	전년대비 증가율	농림수산 식품분야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대비 비중	농림축(수)산 식품부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대비 비중
‘06	2,241,000	6.9	147,703	7.2	6.6	135,539	2.1	6.0
‘09	2,845,000	10.6	168,745	6.0	5.9	146,363	4	5.1
‘12	3,254,000	5.3	181,322	2.8	5.6	136,779	3.7	4.2
‘15	3,754,000	5.5	193,065	3.1	5.1	140,431	3	3.7
‘16	3,864,000	2.9	193,946	0.5	5.0	143,681	2.3	3.7
‘17	4,005,000	3.7	196,221	1.2	4.9	144,887	0.8	3.6

자료 :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각연도자료(www.mafra.go.kr)취합·정리

- 위의 표를 보면,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06년 6.6%에서 2017년 4.9%로 감소하였음. 또한 ’17년 전년 대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은 3.7%인 반면 농업예산 증가율은 0.8% 수준임.
- 특히, 박근혜 정부의 ‘13년-’16년 농업예산 증가율은 평균 1.25%에 그쳐 참여정부 평균 3.46%, 이명박 정부 2.46%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망 정비·확충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고, 농업의 다원적기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예산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정부가 실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있어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여하는 바는 크지 못하며,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음.

- 농업직불제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으나 2014년 기준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 액수는 농업소득의 18.2%, 농가소득의 5.4%에 불과하여 실제

농가소득 기여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현행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한계가 있으며, 특정 품목 집중, 면적당 지원에 따른 농가 양극화 문제, 복잡한 제도와 시행체계, 통합성 제고 불가, 불명확한 상호준수 이행조건 및 직불제 공감대 형성 한계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공익형 직불제와 소득보전 직불제의 조화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상호준수의무를 전제하면서 현행 직불제를 전면 확대·재편해야 함.**

-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WTO/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발생 가능한 농가소득의 하락, 농업경영의 불안정 문제 외에도 자국의 농정문제 해결 및 농정목표 달성(식량 공급, 국토 균형발전, 농업환경 및 자연보호, 문화경관보전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를 개편·강화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공익형 농업직불제를 확충하고 쌀 등 주요 품목 생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리스크를 완화하여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공익형직불제에 있어서는 농가의 의무이행 준수를 전제하여 다원적 기능 제공자로서 농업생산자가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함.

6) "식품안전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

대선공약 요구사항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조직으로 편성·운영중인 식품 위생·안전관리 조직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인 "식품안전청"으로 독립·편성해야 함

- 식품산업의 진흥·발전 업무는 기존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서 담당토록 하되,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안전평가 업무는 "식품안전청"에서 담당토록 함으로써 식품안전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함
- 이를 통해 국제기구(FAO, WHO)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식품안전은 사육·재배시 농약, 항생물질 및 광우병 등 질병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달성될 수 있는 것임)

○ 신설되는 "식품안전청"이 담당해야 할 업무

- 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중인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 기준설정, 허가, 심사, 지도점검, 시험검사, 위해분석, 연구개발, 교육, 홍보 등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함
- 농업인·소비자교육·홍보·교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 업무 등

제안 배경

○ 2013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중이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전문적·체계적인 업부 수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산업 진흥·육성 업무를 침해할 소지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일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2월 직제 개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시도하면서 산하 국·과의 명칭에 "식생활소비", "식생활영양", "수입식품정책" 등의 표현을 반영하려 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물

론 한농연 및 축산관련단체 등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무산된 바 있음

- 식품위생 및 안전 관리 업무에 있어 전문성·체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식품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의약품과 동일(유사)한 단속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의 진흥·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임
- 식품안전은 원재료가 나오는 최초 사육·재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약, 항생물질 및 각종 가축질병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원재료가 나오는 사육·재배단계를 관리할 수 없으므로 체계적·전문적인 식품위생·안전의 관리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농업선진국들도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기존 식품안전 담당 부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자 전면 쇄신을 단행하였으며, 농업식품부처 중심으로 개편된 경우가 많음(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등)

7) 사회보험 방식의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제도 도입

대선공약 요구사항

○ 민간 보험회사(NH농협생명)의 보험상품에 임의가입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행 "농업인안전보험"을 대체하여, 중앙정부가 의무가입 방식의 사회보험인(산재보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을 도입·실시해야 함

-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에 모든 농업인과 농업노동자들이 의무가입토록 함
- 위험성이 높은 농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험 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함
- 사망 또는 고도장해시 지급하는 보험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함

제안 배경

○ 기존의 "농업인안전공제"를 대체하여 NH농협생명보험에서 "농업인안전보험"을 판매·시행중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아닌 민간 보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농업경영주이자 자영업자인 농업인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근로자의 성격이 인정되어야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농·축협 직원 혹은 농업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 특히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개인 사업자 및 일부 농업법인은 가입을 기피하는 상황임.

[2. 주요 5개 정당 농정 책임자 토론회]

❒ 사회 :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 토론 참석자 및 패널리스트

- ❍ 자유한국당 : 이현재 정책위의장
- ❍ 바른정당 : 이종구 정책위의장
- ❍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농업인위원장
- ❍ 국민의당 : 김종회 국회의원
- ❍ 정의당 : 김용신 정책위의장

❒ 토론회 진행 방식

- ❍ 각 정당의 핵심 농정공약과 3대 핵심 질의(쌀 문제, 농업 인력 문제,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 각각 1분씩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답변 순서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매 질의 시 의석수를 기준으로 참석 정당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하였다.

[주요 토론 결과]

❑ 좌 장 이정환

대선은 국가적으로 항상 중요한 일이다. 특히 올해는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아래에서 이뤄지는 선거이고, 정치경제안보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관심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칫 농업문제가 소홀히 다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한다. 안보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완전 시장개방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농업문제도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지난 30년간의 농정의 성과와 문제를 성찰하고 농정의 새로운 틀을 제시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오늘 대통령 후보 5개 정당 농정책임자 토론회를 통해서 새 대통령이 농정의 새로운 틀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최측의 좌장 제안 받고 밤잠 설치면서 공부 많이 했다. 그런데 이 토론 시간이 달랑 50분이라고 해서 아쉬움이 많았고 패널도 같은 심정 아닐까 생각이 든다. 5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해서 500분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아껴서 진행하겠다. 오늘 줄이고 줄여서 네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다섯 분께 드리고, 한 질문에 대해서 1분 30분초씩 말씀 해달라. 토론회 전 과정은 전부 녹화돼 나중에 농정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로 쓰일 것이다.

[제1질의 - 각 정당 핵심농정공약]

❑ 좌 장 이정환

각 캠프에서 생각하고 있는 농정핵심공약을 1분에 정말 핵심적인 것을 말해달라.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저는 94년도에 경영인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동지다. 정말 반갑다. 오늘 각 당에 다 정책전문가들이 나왔지만 현장 출신인 제가 이곳에 나온 것

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농정의 기본방향은 농업의 가치를 바로 세워서 여러분의 자부심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철저히 현장 농업인 중심의 정책으로 농정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 우선, 첫째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서 농업을 국정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그리고 농촌과 농업의 문제를 챙기면서 타부처의 핍밥 당하지 않고 제대로 농정 펼치겠다. 작금의 최대 현안인 쌀 문제 완전히 해결하겠다.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해서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쌀 생산비 보장하겠다. 직불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서 농가소득을 높이겠다. 셋째, 청년 농업직불제 등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겠다. 농업인산재보험 실시하고 농업의 재해대책법 현실화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해결하고 마음 놓고 농사짓는 그런 농촌을 만들겠다.

❑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홍준표 후보는 이미 경남도지사를 통해 농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한다는 말씀드린다. 무엇보다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고 농업인소득보장보험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서 쌀값이 안정되고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 연세많은 분들이 많고 떠나는 농촌 되지 않도록 위해서 일본과 EU등 농업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직불제를 통해서 농촌이 우리 경제의 대한민국의 중심역할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을 떠나는 큰 이유가 복지다. 그래서 일면 일중학교, 건강보건을 배치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협이 주로 농민이 생산하는 판매조직으로 바뀌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축산인들의 의견을 모아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차산업이 발달하면서 드론, 스마트농업, 여성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농촌환경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당 김종회

근본적인 농업정책의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농정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쌀값이 21년전으로 폭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패한 이유는 신자유무역주의의 농정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경쟁과 효율이 무기인 신자유주의 경제는 농업정책에 결코 적용해서는 안된다. 농업정책은 보호주의로 돼야 한다. 농업예산이 3.6% 밖에 안되는데 400조원의 국가 전체 예산 중 타 산업과 경쟁과 효율을 맞닥뜨려서 씨름하라는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농정은 파탄 지경이고 농업 종속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에서는 신자유주의 개념을 버리고 농업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보호주의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제시하고 농업의 삶의 질 향상, 농업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며,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둬서 대통령이 농업정책을 확실히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정책이다.

❑ 바른정당 이종구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근간을 이루는 뿌리 산업이고 농민은 그러한 생명산업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업이 산업 발전단계에서도 중요하다. 그동안에 농업분야에 약 20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농업·농촌·농민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장개방과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변화된 여건 하에서 새로운 접근과 농정의 일대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승민 후보는 여러 농정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3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쌀에 편중된 농업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쌀 공급과잉에 의한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 둘째, 농촌에 청년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을 핵심농정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농수축산인 식품종사자 등 농식품인 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을 지방정부 중심의 상향식 농정으로 전환하고 모든 주요 농정을 여기 있는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농업인 주권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 정의당 김용신

정의당은 어느 후보보다 농업공약을 이미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가장 먼저 3월 26일에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혁신농정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겠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라는 가장 중요한 농업의 중요한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첫 번째다. 두번째는 식량 자급률 법제화를 통해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것,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농업의 철학이자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국가 예산의 5%는 돼야 한다. 현재 14.5조원에 불과한 예산을 임기 내에 20조까지 올려내겠다. 이를 통해 월 20만원 농민 기본소득과 함께 직불금 개편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농업정책으로 한다는 말씀드린다.

[질의2. 농업인력 육성 문제]

❑ 좌장 이정환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다. 농업이 지속가능 하려면 능력과 의욕이 있는 젊은이가 계속 농업농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금융제도나 보험제도도 정비돼야 하고 특히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직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농연을 비롯해 많은 농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농업후계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농업인 인력육성정책에 대해서 각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달라.

❑ 자유한국당 이현재

저도 농촌 출신으로 시골가면 어르신들만 있어서 정말로 떠나는 농촌이 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인데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청년직불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1600만원씩, EU는 260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농촌이 안정돼 있다. 그래서 떠나는 농촌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왔고 앞으로 농업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해서 또 더 좋은 제안을 주면 함께 포함해서 청년이 많이 모이는, 그래서 지속가능한 농촌이 돼 농촌이 과거에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이끌어가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국민의당 김종회

지금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제가 국회 당선되기 전 꼭 오늘 이맘때에도 농사를 지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현실이나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피부 깊이 느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계농 양성이다. 그런데 후계농 양성이 되지 않은 이유는 소득보장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농정정책에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자녀의 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가 최소한 이정도만 해결된다고 하면 서로 앞다퉈 후계농이 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가구당 최저생계비가 741만원이다. 그런데 하위 20%의 영농인의 소득은 686만원 밖에 안된다. 그러니 어느 누가 후계농에 참여하겠는가. 이러한 부분을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철저히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국가가 보호하는 정책, 이것이 돼야 하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직불제는 당연히 도입해야 하고 4차산업 혁명의 기술융복합, 스마트농업 보급과 육성을 통해서 청년농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바른정당 이종구

지금까지 정부는 농촌 인력양성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기술변혁의 시대, 농업에서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적다는 것은 한국 농업의 미래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바른정당은 농

업핵심인력양성을 위해서 세가지를 추진하겠다. 현재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둘째로는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이 농촌에서 정착될 있도록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한국농수산대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미래에 대비하겠다. 셋째는 이러한 농업인력양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농업인력유치 및 양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 정의당 김용신

지난해 2월 25일 한농연 주최 총선토론이 있었다. 국회에서 있었는데, 그날 유일하게 청년취업농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정의당이다. 그 후 1년 사이에 많은 정당들이 이 제도를 공약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유는 그렇다. 우리 농촌에 청년농민들 찾아보기 어렵다. 40대 이하가 불과 55만명이다. 20대와 30대를 합해야 겨우 3만3000명이다. 이래서 농업을 가져갈 수 없다.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는 게 정의당 판단이다. 5만명의 청년 취업농을 두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매년 45세 이하 청년 취업농을 선발해서 월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 농사를 처음 지어서 수확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한 1년 정도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3년은 정착기간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197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은 2012년부터 이 제도 도입한바 있다. 청년 취업농 제도를 농촌에 청년농민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도록 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 가운데 40세 미만 인구가 1.3% 정도 된다. 65세 이상 고령농이 50% 넘었다. 저도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시골 농촌마을에 가서 보면 더 상황이 심각하다. 이 농업경영인제도라도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어떤 문제보다도 농업의 후계인력양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는 약 세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한다. 첫째 후계농업경영인이 지금 매년 1800명씩 되고 있는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업인 육성

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말했지만 청년농업인직불제를 도입해서 젊은 세대들의 영농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 4차산업혁명에 부합해서 농업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농업계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고 농업계 대학을 적극 지원해서 농협과 농업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인재채용할당제 통해서 농업기술인력이 활동하도록 하겠다.

[제3질의. 쌀 문제]

❑ 좌장 이정환

쌀 문제다. 작년산 쌀값이 전년보다 20% 이상 하락했고 정부의 쌀 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농정예산도 많이 잡아먹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농정문제로 등장했다. 그래서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고 생산조정제는 문제가 있다, 쌀 직불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쌀 문제가 아니라 논 이용 다양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쌀 문제가 농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데 각 당에서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달라.

❑ 국민의당 김종회

세가지 질문인 것 같다. 우선지급금 환수문제, 쌀생산조정제 문제, 대북쌀 지원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당 입장을 말하겠다. 쌀값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잡곡, 콩, 옥수수 등 자급률이 떨어지는 식량작물을 논에 재배할 경우 식량안정제를 도입해서 일구조치를 하겠다는 것. 둘째 밥쌀용 쌀 수입을 우리는 엄금하겠다는 것. 셋째 법적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 특히 이 부분은 교섭단체 중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환수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대북 쌀 지원재개 문제는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가능한 대북 쌀 지원을 하겠다는 것. 이와 같은 방향으로 쌀 수급 안정화를 이루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양곡정책을 펼 것을 약속드린다.

❑ 바른정당 이종구

그동안 정부는 쌀 수급 예측을 잘 못한 가운데 쌀 공급 과잉을 초래해서 쌀수급관리와 가격안정정책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양곡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쌀에 지나치게 편중된 농업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생산 측면에서는 논에서 벼 이외에 사료작물 또는 잡곡 등 타작물 재배 시에도 농가소득을 일정수준 보전해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전면 도입하고, 쌀 직불제도 생산중립적인 방식의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고품질 쌀 품종 보급 확대와 친환경 쌀 재배확대를 통한 쌀 품질제고, 생태농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소비측면에서는 쌀의 산업용 활용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촉진 위한 소포장 유통확대를 통해서 유통체계를 개편토록 하고. 가칭 쌀상품화연구소를 설립해서 쌀가루를 원료로 사용하는 R&D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

❑ 정의당 김용신

쌀이 남는다. 남는 게 최근 몇 년 동안 됐다. 그래서 정부는 논에 타작물 경작을 지원하는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보는 데 정의당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논에 타작물 경작을 지원하게 되면 타작물에 의한 가격 영향이 다른 작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판단이 필요하다. 밥쌀용 쌀 수입을 먼저 금지하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중단돼 있는 대북쌀 지원 재개해야 할 것이다. 좀 더 길게 바라볼 때는 우리 쌀 농사 외에 패러다임을 부분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그 적기일수도 있는데 친환경 전환을 위한 일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친환경 전환과정에서 초기에 감산이 불가피한데 이를 통해서 일정한 양에 의한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정의당은 친환경 전환과 관련해서 친환경직불금 관련해서 1ha당 고정직불금을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서 친환경 쌀 생산재배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통해 쌀 자급률 100%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문재인 후보는 농업정책공약의 핵심과제로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쌀 가격이 20년 전으로 추락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실패의 결과다. 이 문제를 방치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쌀 재고미는 200만톤, 관리비용만해도 2000억원, 손실비용 4000억 창고에서 죽어가는 돈이 6000억원의 1/4만 사용해서 5만 ha 이상의 쌀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다. 문재인 캠프에서는 쌀 생산조정제를 강력히 시행해서 재고미를 적정 재고미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리고 그 낮춰진 재고미의 여러 가지 관리비용을 줄여서 생산조정제에 투입하고 그 여력을 가지고 쌀 목표가격을 최소한 시중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정도로 올리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보면 현재 18만8000원의 쌀 목표가격을 내년에는 19만6000원 정도로 올릴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생산조정제를 걱정하고 있는 사료용, 휴경 등을 가동하면 이 바보같은 쌀 정책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자유한국당 이현재

경남도지사 시절부터 쌀값 안정시키는 것이 농가소득 안정의 핵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서 작년에 보면 쌀값 안정을 위해서 추가로 수매하는 정책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적정한 생산을 통한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조정제가 필요하고 빈 논에는 타작물을 재배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촉진이다. 다양한 소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수출도 하고 해서 쌀값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목표가격이 18만8000원인데 이것도 인상해야 한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인상함으로써 쌀 농가에 소득보장이 돼 이렇게 할 때 지속가능한 농촌이 된다고 생각한다. 실천 가능한 방안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쌀값 안정을 시키는 것이 우리농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제4질의. 식품안전 문제]

❑ 좌장 이정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식품안전문제다. 국민의식조사를 해보면 식품안전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을 만큼 식품안전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그래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인데, 안전에 대한 행정은 단순히 감시한다거나 감독해서 되는 게 아니고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 과정의 하나하나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나 국가의 인식이다. 선진국에서 보면 식품안전업무를 농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안전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해서 통합하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한농연의 핵심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정부조직에 관한 얘기라 어려운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 정당의 생각을 말씀해달라.

❑ 바른정당 이종구

기본적으로 한농연이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농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농민의 생산·유통·도·소매가공 등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각 과정마다 검역과 검사를 통한 안전성과 위생관리가 필수다. 각 단계마다 관할기관 다르고 특히 검역과 검사기관이 분리돼 관리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농업선진국처럼 농식품 담당 부처 중심으로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른정당은 이를 위해서 농식품부 산하에 외청으로 가칭 농식품안전방역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 안전위생검역검사와 가축방역관리를 일괄해서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농식품 안전 뿐만 아니라 농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산물 생산에서 식품산업진흥까지 국가푸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

❑ 정의당 김용신

기본적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장부터 유통과정, 식탁에 오를 때까지의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품안전청을 별도 기구로 독립하는 것은 정의당도 같은 생각이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AI를 포함한 구제역 등에 대한 방역문제가 심각하다. 가축질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농림부의 일부 과로 돼 있는 부분을 수의방역국으로 지위를 격상해서 지자체에 공공수의사를 배치하겠다. 이를 통해서 방역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실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조직 개편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그 정책을 다루고 있는 관료들의 농업에 대한 태도와 인식문제다. 어느 토론자가 말해줬지만 지난 10년만의 문제인가. 우리 농업담당정책위원회 어머님이 전 대통령 탄핵되는 날 통화할 때 그러더라. 대통령 바뀌면 좀 나아질까. 그런데 노무현 때도 힘들었어. 이런 얘기하는 게 농민들의 현실이다. 정의당, 정권에 흔들리지 않고 농업에 대한 방향과 가치를 바꾸는 문제에 함께 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식품 먹거리의 안전성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산업의 진흥업무는 농식품부에, 식품안전관리는 식약처에 맡겨졌던, 이원화된 이 식품관리정책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금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식품안전청을 농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하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약화하겠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최근에 축산방역과 위생의 통합관리가 필요한데 현행 축산관련 위생업무가 식약처와 농림부로 이원화 돼 있다. 이것도 일원화 해서 체계적 식품위생관리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캐나다,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식품안전성 문제가 단순한 규제와 감시차원이 아니라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상의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원화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 산업이 지속되도록 하겠다.

❑ 자유한국당 이현재

식품과 농업을 연계해서 농식품부가 과거처럼 하고 지금은 식품안전청을 농식품부 안에 둔다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하다가 현 정부 들어오면서 분리돼 있는데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그간의 운영경과를 점검해서 면밀히 해서 식품도 농민과 함께 연결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농업의 문제, 농민의 문제, 식품의 문제 등 모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농업발전위원회나 농림식품수석이나 대통령 밑에 직속기관을 만들어서 관리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농업과 식품행정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에서 생각할 때 이번 구제역, AI 등에서 각 부처가 단일화 되지 않아서 3000만수 이상을 매몰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이 없고 답이 없다.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식품안전청과 농식품부는 단일화돼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다. 실제 국회 상임위 명칭만 봐도 농림축산식품으로 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외청에 둬야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먹거리 안전, 위생, 질병 이러한 일관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식품사고의 근절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식품사고가 도처에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서로가 전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생산유통판매에 책임지고 있는 농민만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이런 부처 배정에 또다시 농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서두에도 말했지만 국민의당에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식품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으로 두어서 농민들 의견을 직접 청취하려고 하고 있다.

❑ 좌장 이정환

식품안전문제를 농식품부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고 외청으로 한다든지 방역업무를 강화한다던지 하는 말을 했다. 이것 각 당에서 말하자면 당론으로 확정된 것인가.

❑ 패널 모두

공약한다. 정의당은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마무리 발언]

❑ 좌장 이정환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못다한 말,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린다.

❑ 정의당 김용신

정의당은 농민의 소득보장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왜 그러냐면 농민이 단순히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 가치를 농민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동체를 대신해서 국가가 농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게 국가의 의무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 드리겠다. 한·미 FTA 얘기 나오고 있다. 오바마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한다. 자국 국민들에게 어떤 특정국민이, 농민이 피해가 예견된다면 그 통상 안하겠다고. 미국은 그런 얘기한다. 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한다고 한다. 정의당 당당하게 얘기하겠다. 트럼프한테 한·미 FTA의 농업피해, 정정당당히 재협상하자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바로 심상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방금전에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장이 쌀 목표가격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인상하겠다

는 공약을 보면서 때늦었지만 반가운 목소리였다. 다음 정부는 반드시 쌀 목표가격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인상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경영인 여러분, 제가 도발적인 질문하나 드리겠다. 선거 때마다 많은 공약 쏟아지지만 얼마나 믿는가. 얼마나 실천됐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의미에서 공약의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공약의 실천의지, 능력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존재하는 정당 중에 유일하게 농어민위원회를 두고, 농업인 비례대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현장농민의 의사를 반영한 공약을 농어민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의석으로 이런 개혁안을 실천할 수 있다. 문재인 캠프는 농정개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 자유한국당 이현재

홍준표 후보는 농업이 선진화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선진화될 수 없다는 강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농업공약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업에 있어서는 소득보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쌀값안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또 농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영란법 고쳐야 된다고 해서, 농축산물을 예외하거나 3·5·10을 10·10·5로 해서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공약을 이미 발표했고. 경남지사를 통해서 농민과 함께 호흡해 온 분이다. 많이 도와달라.

❑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은 지킬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공약한다.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공약만을 한다. 그것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했던 삼농정책이다. 상농 농민의 지위 향상시켜야 한다. 후농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돼야 한다. 편농 농민들이 영농행위를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자식을 지를 수 있고 자식을 교육시킬 수 있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이것이 진정성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이것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비례해서 쌀값을 조정해야만 한다, 농자천하지대본의 농자의 의미요, 국가의 근간과 대본을 아우를 수 있는 농업정책을 실천하겠다.

❑ 바른정당 이종구

250만 농민 여러분, 220만 식품업계 종사자들게 말씀드린다. 유승문 후보는 농식품이 주권인 시대를 열어가겠다. 여러분이 농식품 정책의 주인이다. 이를 위해서 모든 농정을 농식품인 여러분과 상의하고 소통해서 결정되고 실천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앞서 말한 공약과 더불어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농식품미래성장위원회를 두겠다. 농업인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선진농업시대를 반드시 열도록 하겠다.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구호성이 아닌 농축수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외규정을 두어서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 좌장 이정환

각 정당과 캠프에서 농정 문제가 정책의 중요한 분야로 다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89년에 소위 BOP조항이라는 수입조항이 철폐되면서 수입개방 맡게 됐다. 그래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쟁력 향상이라는 농정 틀이 형성됐고 2004년 이후 진행된 동시다발적 FTA를 겪으면서 30년간 농정이 지속돼 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업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정의 틀을 재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까지의 농정이 1990년 체제라면 앞으로 농정을 2017년 체제가 되어야 하고 도시민, 소비자, 농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간절히 바란다.

[3. 각 당 대선후보 농업관 강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농업관 강연' 초청 대상은 '원내교섭단체의 대통령 후보'이거나 '전국적인 정당 조직' 혹은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 상위 5위권 이내'에 포함되는 후보들로 제한 하였으며, 위의 원칙에 따라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를 초청하였다.

대선후보 농업관 강연

문 재 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반갑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오늘 '한농연 대선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지식 회장님을 비롯한 한농연 지도자 여러분, 14만 회원님 그리고 300만 농업인들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6년 9월 25일 온몸으로 국민의 권리를 외쳤던 의로운 농민 고 백남기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농민의 한과 눈물을 안고 떠나셨습니다. 정의롭고 선한 국민이었습니다. 묵묵히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일한 만큼 결실을 거두어들이던 정직한 농민이었습니다. 누가 정직하고 선한 농민 백남기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불통의 정치, 부패한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주권을 외치는 국민에게 물대포를 쏘던 정권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겁박하던 정권입니다.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권교체를 이뤄, 부패 기득권세력의 나라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바꿔야 한

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농민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고인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나라, 상식이 상식이 되고 원칙과 정의가 이기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과 함께해 주십시오. 문재인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로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 농업이 천하의 근본 맞습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농업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5년 농어업예산은 국가전체 예산의 16%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농업예산은 전체예산 400조 가운데 겨우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가소득은 제 자리 걸음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은 교육과 의료, 교통과 문화 모든 점에서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현실이 농자천하지대본 입니까? 농업홀대, 농민무시, 농정실패가 농자천하지대본 일 수 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우리 농민들은 버림받아 왔습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그야말로 3무정책(三無政策)이었습니다.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업시장 불안, 물가안정의 희생양으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 비료값, 사료값,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불안, 태풍, 냉해, AI, 구제역, 등 각종 재해 불안, 4대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데 농정 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농업이 희생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눈물과 희생을 항상 마음에 담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민 생명산업입니다. 식량주권을 지키는 안보산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 온 잘못된 농정을 철저하게 뜯어고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비서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농업 전반에 걸쳐 마음을 열어 농민과 소통하고 미래 관점에서 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농업활성화를 위한 7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5만 원짜리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만큼 농업인들의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농업예산부터 재편하겠습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겠습니다.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습니다. 농촌에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 농촌 살림살이 확실히 살려보겠습니다.

둘째, 공공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풍년이 돼도 걱정 흉년이 돼도 걱정입니다.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산물 가격이 폭락합니다. 농산물이 남아 추수를 포기하고 생떼 같은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농촌 상황이 이런데, 매일 한 끼 이상 밥을 굶는 아이들이 35만 명입니다. 홀로 사시며 진지를 거르는 어르신도 34만 명입

니다. 공공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군대급식과 65세 이상 어르신급식, 저소득층급식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과일간식·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농산물 가격도 지키고 농산물 판매까지 늘리는 1석 3조의 사업입니다.

셋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 환경이 갈수록 낙후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아 폐허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낡은 농촌 슬레이트 지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전반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하여 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 농·귀농인·소농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농촌 사람 사는 농촌 만들겠습니다.

넷째. 아이 키우기 좋은 농촌, 건강한 농촌 만들겠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데 도시 다르고 농촌 달라선 안 됩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농촌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아이도 엄마도,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거점마다 분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을 순회하며 보건과 의료,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아이, 임신부와 산모에 맞는 맞춤형 방문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

대하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개조하여 공동취사 공동생활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연례행사입니다. 강력한 사전 방역작업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초기방역을 위한 조기대응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적극적인 방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하여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해 책임 있는 방역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질병은 이제부터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직접 가입해야합니다. 낮은 보장성으로 영세한 농민들이 받는 혜택이 적습니다. 이제 농어업 종사자를 의무가입으로 정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수준의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하는'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농사짓다가 다치시면 정부가 책임지고 치료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생명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생태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명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현재 농어민이 주도하는 첨단융복합 농어업단지를 스마트 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준비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전국 1,500여 읍면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대 농민단체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자리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농정을 의논하겠습니다.(장내 박수 환호) 농민단체와 시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임지는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경남 양산 농촌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네 농협매장에서 비료와 사료를 구입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의 농촌, 농업, 농민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민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문재인, 농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 준 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집권경험이 없는 정당의 후보는 항상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집권할 수가 없으니까 약속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빈농 출신 입니다. 오늘 저녁에 SBS에서 5당 후보 토론회를 합니다. 오늘 밤 10시에 토론회를 보시면 판단이 서리라고 봅니다.

오늘 농민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약속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당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집권을 하게 되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 임산물을 제외하겠습니다. 현재 김영란법 3·5·10을 10·10·5로 바꾸어서 농수축산, 임산물 농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평균 3%에서 2%를 낮추어 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 소요자금이 2천억원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2조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낮춘다고 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도지사를 하면서 경상남도 농어민 단체들과 경남농정 2030프로젝트를 만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농가마다 평균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게 되면 대한민국은 농촌으로 돌아올 것 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농업장려 정책으로 가장 먼저 소득증대 정책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사는 농민이 되고, 농촌이 되어서 돌아오는 농촌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약속만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철 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5년 만에 또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가장 저한테 기억에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서로 대화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5년이 지난 지금도 농업, 어업, 축산업 사정이 나아지지 않음에 정말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는 먹거리에 관해서는 경제학적인 관점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수입곡물이 훨씬 더 싸다보니 국내 먹거리 농업은 버려두고 외국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 명입니다. 2050년이 되면 90억 명까지, 세계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상기온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전세계적인 식량생산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심각한 곤경에 처할 겁니다. 식량무기화도 가능하게 될 테고, 가장 고통 받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외국에서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국내농업 버려두는 것은 이건 정말로 안 됩니다.

에너지 장기수급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생산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장기수급계획입니다.

다음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식량장기수급계획 꼭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탕해서 우리가 식량자급률을 꾸준히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대통령직속 농업발전위원회가 바로 장기식량수급 계획 세우는 컨트롤 센터가 될 겁니다.

그 밖에도 큰 틀 다섯 가지 정도 소중한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주권확보를 통해서 농정의 새시대 열겠습니다. 쌀 등 주요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수급안정화를 통해서 식량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로 논에 벼 이외에 타작물 재배하도록 해서 옥수수, 콩 등 부족한 곡물자급률 제고하고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키우고, 농촌을 회생시키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영농인재들 키워내서 침체된 농촌사회, 활력 불어넣겠습니다. 농업 기초인력 집중육성하고 전문성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농가, 여성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어르신,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영농지원 서비스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가소득 높이고 안전망 정비하겠습니다. 저는 익산 식품클러스터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곳에 방문해서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진척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들을 농업에 접목하면 우리는 식품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첫 시도가 저는 전북 익산의 식품산업클러스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처럼 나라가 농업을 식품산업으로 발전시키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북 익산의 식품클러스터산업이 조금 더 발전하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 확대되도록 이것은 지역산업이 아니라 국가산업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생태환경 보존형 직불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정부와 농업인 간 협약에 의해서 환경보전활동 사항을 결정하고 이행여부, 사후점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업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체계 개선해야 합니다. 식품안전 사고는 바로, 농어가에 직격탄이 되어 왔습니다. 그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식품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먹거리의 안전, 위생, 질병 일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GMO 및 수입위해식품 관리를 강화해서 먹는 것으로 우리 국민 속이는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쌀소비 확대를 위해서 학교급식 개편하고, 어린이 체질개선을 위한 과일급식 프로그램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식품산업발전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지켜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 의료, 문화, 환경을 도시수준으로 높여가고 농업인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꼭 키워나가겠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삼농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농업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는 상농, 둘째는 수익이 나는 농업이 되어야 한다는 후농, 그리고 셋째는 편하게 농사지어야 한다는 편농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삼농의 정신으로 이 두 손 걷고 직접 챙기겠습니다. 국민농정의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저 안철수가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 승 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언행의 일관성은 신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 하는 기준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약속을 지키려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입 발린 소리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농업농촌을 위한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농연은'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을 첫 번째 농정공약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쌀에 너무 휘둘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쌀 보조금과 가격 지지에 필요한 예산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정부가 더 나은 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쌀 외에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공익형 직불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농업과 관련된 여러 산업들, 예를 들어 식품이나 종자, 비료 등의 발전이 농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

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4차 산업 혁명을 얘기하는데,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을 통해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분야에 5년동안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또 한농연 요구사항 중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농촌의 평균연령이 65세가 넘고, 70세가 넘는 가구 수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짓고 정착하고 성공할 때까지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에 관한 법률' 과 '청년농업인 직불제'는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대로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기 대처가 늦고, 허술하다보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는데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축산품부 산하에 '농식품안전방역청(가칭)'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과 가축질병 방역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식품안정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하라는 한농연의 요구사항처럼 '농식품안전방역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농촌에 관한 문제야 말로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큰 재량을 갖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주면서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도록 각 시도 기초단체에서 주도하는 게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정책과 관련해선 중앙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어떻게 쓰느냐는 지방정부와 협동조합 등에 맡겨 농업인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맞지만 3·5·10만원이라는 가액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1년 6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에 권한을 준 것인데, 이 기간 동안 농업·농촌 특히 화훼와 축산업에 대해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부가 심사숙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식사 및 선물에 대한 가액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최단 시일 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을 지켜나간다는 사명감으로 분발해 주시고, 젊은 후계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데도 한농연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아픔을 알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대통령이 꼭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 상 정

정의당 대선 후보

다른 후보들이 농민 농업 다 살리겠다고 약속했죠?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누가 다시는 우리 농민들이 경운기 끌고 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도 되게 만들지, 누가 우리 고 백남기 농민과 같은 처절한 농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이거 오늘 따져보려고 오신 거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유승민, 홍준표 후보 대통령 되면 박근혜 정부때 한 것처럼 할 거 같죠, 그렇죠? 그 분들 이미 다 정권잡아서 해봤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되면 이명박, 박근혜정부때 농업 정책 그대로 되풀이할 겁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면, 참여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께서는 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셨는데, 저 보수 쪽으로 가니까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쯤 가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들어보셔야 합니까?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선거로 끝나선 안 됩니다. 우리 농업을 바꾸고 농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그

렇죠, 여러분? 맨날 말만 앞세우고 선거 때 와서 약속만 하고 뒤돌아서면 농업정책을 어디 정책자료집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대통령 다시 뽑으시겠습니까?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농정교체, 정권교체 할 후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이 이 지경이 된 책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시키면서 개방농정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역대 정부 모든 정부가 농업을 후진산업으로 규정하고 경제발전, 산업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양 삼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미FTA타결 때, 또 그 이후 모든 농업현안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한 편이 되어 싸운 유일한 정당 어디입니까, 여러분? 정의당입니다. 저는 거짓말 안합니다.

그동안 똑바로 했으면 찍어주고 똑바로 안했으면 안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온 후보들 중에서 역대정부 집권당에 몸 담았던 후보들로부터는 농업붕괴, 농민 몰락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진정어린 사과부터 여러분이 받으셨어야 합니다. 사과도 없이 이 자리에서 또 장밋빛 공약 흔들면서 여러분 표만 얻어가려는 대통령, 이제는 믿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산업화, 세계화 30년 동안 가장 피해를 본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농업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쌀 시장가격이 12만8800원으로 폭락 한 것은 명백히 양곡정책의 실패 때문입니다. 21만원은 해야 할 쌀값을 8만 원 이상 폭락 시키고 변동직불금을 1조4천900억 원이나 지급하게 된 것도 정부 책임입니다.

저 심상정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우선지급금 환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부정책 실패에 따른 정부의 손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정책실패의 피해자인 농민에게 더 들어간 돈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말할 자격 없습니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그동안 홀대받아온 우리 농업과 농민이 제대로 대접받고 존중받는 그런 농정대전환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은 정권교체를 넘어 대전환적 농정교체를 통해 농업과 농민, 농촌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밥상 지키는 밥상혁명을 여러분과 함께 실현하고자 합니다.

농정교체의 첫 번째 과제는 우리 농업을 생태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대한민국 농업이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간 우리나라는 식량증산정책에 따라 화학비료와 농약, 항생제와 살균제를 사용하여 좁은 농토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왔습니다. 외국 농산물과 무방비로 가격경쟁을 하게 됐고 그러다보니 농업 존립과 국민 식탁의 안전이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GMO와 방사능 오염 등 불안전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역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식품안전기준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선진국은 이미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수 십 년 전부터 생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농사를 짓고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농민들에게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상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WTO/FTA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농민들 또한 가격 걱정 없이 농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직불금과 농민기본소득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주곡인 쌀부터 친환경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당장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저는 친환경 쌀직불금을 ha당 400만원 씩 지급하겠습니다.

농정교체의 두 번째 과제는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판매소득만으로는 안됩니다.

저는 65세 이하 남녀 모든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공약은 지금 5명 후보 중 오로지 저 심상정 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해드립니다.

농정교체의 세 번째 과제는 농업의 생산기반 및 가공, 유통 등 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기초농축산물에 대한 품목별 식량자급률 달성 목표를 법으로 정하고 곡물자급율 40%, 식량자급률 60%를 달성하겠습니다.

농지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영농인력도 확보하겠습니다. 영농인력 확보 관련, 45세 미만 청년농부의 농촌 유입을 위해 청년취업농 정착지원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겠습니다. 매년 1만 명에게 월 100만원씩 5년 동안 지급하여 50세 미만 농민이 70만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통과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것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실시하는 경매거래를 폐지하고 다양한 거래방법을 생산자가 선택하여 유리한 가격이 결정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교체를 위한 네 번째 과제, 여성농민이 살기 좋은 농촌입니다.

농촌에서 사는 젊은 여성농민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아이들 교육과 어르신 건강입니다.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농어촌에 초등학교를 유치하고 혁신학교로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공공기숙사를 제공하고 대학 특례입학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독거노인들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마을공동생활주택을 보급하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농민 참여가 보장된 농정운영으로 농정대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농민과 소비자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합의기구로 농소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를 중앙과 지역에 설치해 다양한 생산자대표와 여성농민 30% 이상이 참여하는 농정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 통일대비 농업입니다. 당장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서 북한의 광물 등과 물물교환을 시작하고,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해서 남북농업식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민 여러분,
농업은 농민들만을 위한 산업이 아닙니다.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안보산업이고 생태산업이고 미래산업인 것입니다.

심상정의 농업정책은 그래서 농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며, 생태환경을 위한 정책입니다. 정권교체가 되어도 농정의 근본을 전화시키는 농정교체가 없다면 우리 농민과 국민은 실패한 정권교체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 심상정과 함께 농민소득이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농업이 중심이 되는 농정교체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과감한 개혁으로 우리 농민들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 저 심상정이 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4 장

각 당 농정공약 및 한농연 대응활동

1. 각 당 농정공약 전문

더불어민주당 농정공약

[목 차]

1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습니다
2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3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4	여성 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5	사람 살맛 나는 농어촌 만들겠습니다
6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농업을 대비하겠습니다

※ 편집자 주 : 더불어민주당 농정공약 중 어업 관련 공약은 삭제함

1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습니다

1 농정 철학과 기조를 바꾸겠습니다

○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한 농정의 결과가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더욱 키웠습니다.

○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습니다.

○ 농업의 무한한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협동과 상생의 가치를 포용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나라, 돈 보다 '사람'이 중심이고, 국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농어업을 실현하겠습니다.

2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 힘 있게 농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잘 운영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폐지한 협치기구를 부활하겠습니다.

○ 농어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종합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식량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국가 법정계획에 통일대비 식량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3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 우리도 유럽과 다른 선진국처럼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합니다. 생태보전과 소득안정, 형평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하겠습니다.

○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 직불제 비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 자치농정, 협치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에 권한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향식 농정으

로는 복잡한 농업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 중앙과 지방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관하여 상향식 자치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여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땅만 보고 농사 짓는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농정에 담겠습니다.

약속 ①
❍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전략(푸드 플랜) 수립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
❍ 지방분권형 농정개편(권한 이양, 인센티브 제공)
❍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 협치농정, 참여농정 실현, 전국-시도-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지원
❍ 농지법 개정을 통해 경자유전의 법칙 재확립

2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 짓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1 쌀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쌀값 폭락은 농민에게 재난입니다. 쌀 가격이 20년 전으로 후퇴하였습니다. 쌀 재고량이 적정량(80만톤)의 3배 수준이고 한해 관리비용만 한해 6천억원이 넘습니다.

○ 쌀값 해결의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입니다.

○ 쌀 목표가격(18만8천원/80kg)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겠습니다.

○ 사료작물 재배와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가공식품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 해외 쌀 지원으로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2 농협의 유통개혁으로 가격과 판로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 농민의 가장 큰 걱정은 판로와 가격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별 농민이 거대한 시장과 맞서기는 어렵습니다.

○ 우리도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처럼 판매사업 잘하는 세계적인 협동조합을 길러내야 합니다. 농민이 생산하면 농협이 제값 받고 팔아주는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 품목별 생산자단체들이 광역-전국 조직을 만들고, 자조금단체와 마케팅보드를 통해 수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 농어촌 농협과 도시 생협 간에 협력도 중요합니다.

3 농어업재해, 농어민산재로부터 국가가 지켜드리겠습니다

○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농작업 재해율도 타산업보다 높습니다.

○ 현재 (농업재해)재해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이 있지만 지원기준과 보장성이 낮아 충분한 보호장치로 부족합니다.

○ 농어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의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산재 보험제를 시행하겠습니다.

○ 농업·수산업 현장에서 다친 사고,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약속 ②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 보장
❍ 대북 쌀 지원 등 통일대비 식량정책 수립
❍ 식량자급률 목표제고 및 농지보전제도 강화
❍ 쌀을 원료로 하는 막걸리와 특산주, 쌀국수, 쌀라면 등 쌀 가공산업육성과 쌀 소비확대 및 지역 특산주의 주세 대폭인하, 소규모 양조장 지원 강화, 온라인 홈쇼핑 판매허용, 지역 특산주 육성, 마을별 특산식품 현장판매 허용
❍ RPC(미곡종합처리장), APC(농산물산지유통센타), 수산물건조장에 대한 농사용 전기 적용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 확대
❍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 생산자조직의 계약재배,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조직 지원 확대
❍ 품목협 협동조합육성, 광역단위 품목조직과 품목별 전국 연합조직 육성
❍ 지역조합을 공동생산, 수확 후 관리, 가공, 유통 등 지역농업 조직화의 중심으로 육성지원
❍ 마케팅 보드(유통위원회), 의무자조금 확대
❍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의 지원기준을 현실화
❍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민 산업재해보험법'으로 개정, 공적사회보험으로 전환

3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1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보전형 생산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드리겠습니다.

○ GMO 완전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 강화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2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은 미래세대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산물 가격을 지키고, 농산물 판매까지 늘리는 1석 3조의 사업입니다.

○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유기가공품 공급을 촉진하겠습니다.

3 공급급식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 우리 사회에 먹거리 복지와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 부모님들 군대에 금쪽 같은 자식 보내고 걱정 많으시죠? 국내 우수 농산물로 군대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라고 굶주리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노인과 저소득층 공공급식을 늘리고, 미국처럼 저소득층 영양공급프로그램(푸드스탬프)을 도입하겠습니다.

4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겠습니다

○ 강력한 사전 방역작업과 조기대응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하여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책임 있는 방역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약속 ③

○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

○ GMO 표시제 강화 및 식품표시제도 강화

○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안전인증 의무화 : 농산물 GAP, 축산물 HACCP, 수산물 안전성 검사 통과제품만 소매 허용, 그 외 제품은 가공품의 원료 등으로만 사용

○ 친환경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노인회관, 대안학교 등 아이들과 어르신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에 공공급식 확대 및 급식공공조달에 친환경·로컬푸드·유기가공품 공급 확대

○ 학교 과일 급식 실시, 우유 급식 확대

○ 우리 농산물로 군대 급식 질 향상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농민장터, 농가레스토랑 등 조성으로 30만 중소농에 소득 향상 추진

- 식교육, 도시농업, 슬로푸드, 전통 식품화의 홍보 확산
-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푸드스탬프) 도입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등 전략식품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농어업 연계 생협 조직 활성화 지원

○ 친환경농산물 분리경매제 도입

○ 공공급식의 안전성과 책임 강화

-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합 강화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
-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서 GMO 식재료 제외

○ 축산 방역 조직 및 예방 강화

- 사전 방역 조기 대응 매뉴얼 정비

○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속추진

-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및 소비유통 지원

○ 항생제 사용억제, AI 백신에 대한 연구 및 생산체계 구축

○ 가축질병공제 제도 도입,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

○ 거점소독시설 현대화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속추진

○ 동아시아농업협력체 결성과 공동방역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적 농업방역협력강화

○ 양계 GP센터(집하) 설립 지원 추진

4 여성 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 여성 농어업인과 다문화가정의 복지를 향상하겠습니다

○ 농업과 가사 모두에서 1인 3역 이상을 하시는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2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청년 농어업인의 양성은 농어업의 미래입니다. 농촌에 농사 지을 젊은 사람이 없는 것은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40세 미만 경영주가 1.3%(14,366명/'15년)에 불과합니다.

○ 2016년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 40세 미만 청년농민직불제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우리도 유럽과 일본처럼 청년농부의 영농정착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3 귀농귀촌과 5060세대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겠습니다

○ 100세 시대, 도시거주 5060세대의 귀농귀촌을 통한 제2의 인생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도시 거주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동임대 주택과 우량 공공임대농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 2030 청년세대의 귀농귀촌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농고와 농대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젊은 인력을 길러내겠습니다.

약속 ④ 여성 농어업인, 미래후계인력, 귀농귀촌
❍ 여성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강화
❍ '도우미 쿠폰제' 확대(출산·교육·휴가·질병에도 확대, 연간 일정 일수 선택하여 사용)
❍ 여성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
❍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공동급식센터 설치 확대
- 지역맞춤형 급식센터로 리모델링 및 주방기기 지원
❍ 민간 여성농어업인 지원 조직 육성
❍ '여성농업인용 농기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강화
❍ '이주여성농어업인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확대
❍ 여성 농어업인의 소규모 생산물 유통 등 지원제도 마련
❍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
❍ 청년농·귀농인·소농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
❍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농어촌 유학 지원을 통한 도농상생과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

5 사람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겠습니다

1 아이 키우기 좋은 농어촌 만들겠습니다

○ 아이들 웃음소기라 들리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내기 너무 힘듭니다. 지역에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겠습니다. 면(面) 지역 작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2 농어촌 교통과 주거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 '100원 택시' 도입으로 농어촌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인체에 해로운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확대하고, 농어촌 어르신의 공동주거, 공동급식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3 농어촌 보건·의료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농어촌 의료 취약지에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 거점 분만지원센터로 산모의 출산을 돕고 임산부, 어린이, 어르신에게 맞는 맞춤형 방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4 농어촌을 국민의 삶터, 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 생태환경과 조화롭고 농어촌다움이 유지되는 국민의 공원으로 가꾸겠습니다.

○ (의료·보건·교육·문화) 생활서비스 거점지역과 배후마을을 연결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농촌공간계획과 중심지활성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삶터로 바꾸겠습니다.

○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산림을 핵심 자연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숲을 일자리와 휴식공간으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산림 휴양,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국민여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및 국가 숲길 네트워크도 조성하겠습니다.

약속 ⑤ 살맛나는 농어촌

○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 도입하여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급식시설 확대

○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확대

○ 농어촌 보육·보건 공공서비스 확대

- 농어촌의 국공립보육시설, 거점 분만지원센터 등 공공보건의료시설 대폭 확충

○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산림을 핵심 자연자원으로 육성

- 수종갱신(2→3만ha), 임도밀도(3→6m/ha)를 확대하여 산림을 경제림으로 개조
- 목재 생산·가공을 연계한 목재산업단지 조성 및 목조건축 지원 실시
- 산림탄소경영 및 거래활성화로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의 10% 상쇄실현

○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등 산림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나무의사, 목공지도사, 숲체험교육, 휴양레포츠 등 청년일자리 개발
-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은퇴 시니어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 산림 유형에 따라 산림 휴양,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국민 여가공간 조성

-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및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숲으로 지정하여 도시민의 녹색복지 증진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숲의 혜택을 누리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숲 체험 시설을 확대 및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 바우처 확대

○ 산촌을 은퇴자·귀촌인을 위한 제2의 고향으로 육성

- 산촌특구를 지정하여 산촌 재개발 및 귀촌인을 위한 주택 분양·임대
- 산촌특구 주변 국유림을 귀촌인을 위한 임산물 재배 공간으로 개방

○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 강화

- 임업분야도 직불제, 재해보험을 도입하여 농·어업과의 차별을 해소
- 은퇴 산주의 산지를 임업 창업자에게 연결해 주는 산지은행제도 도입

6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농업을 대비하겠습니다

1 로컬푸드와 6차 산업화로 중소농가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 로컬푸드직매장, 농민장터, 농가레스토랑을 확대하여 30만 중소농과 가족농의 소득을 향상하겠습니다.

2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농어촌은 민간투자 위축으로 의료, 교육, 보육, 주택, 먹거리, 에너지, 사회적서비스 영역에 일자리가 절대 부족합니다.

○ 이 문제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정부 지원으로 부족한 재원은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농협, 수협, 신협의 상호금융자금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이차보전 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돈이 돌고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농업을 준비하겠습니다

○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미래 식량·물·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고, 생태 환경 보전형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겠습니다.

약속 ⑥ 지역 일자리, 미래농업 대비
❍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 ❍ 농어촌 지역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촌형 일자리 확대 ❍ 에너지자립마을 육성 ❍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최첨단 농어업인 스마트팜·낙농 등 미래농어업으로 발전기반 조성

자유한국당 농정공약

[목 차]

1	청탁금지법에서 우리 농축수임산물 제외
2	농업 정책자금 금리 하향 조정
3	주요 세부 농정공약

1. 청탁금지법(일명 : 김영란법)에서 우리 농축수임산물 제외

o 현황 :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실제 지난 설 농수축산식품 선물세트 판매비중이 2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한우의 경우, 도축량이 7.1% 감소하고 화훼는 18.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집권하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우리 농축수임산물을 제외하기 위하여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회로 바로 제출할 계획이다.

o 이와 아울러 현행 3만원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로 되어 있는 상한 가액을 10만원 (식사), 10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로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2. 농업 정책자금 금리 하향 조정

o 현황 : 현행 평균 3%대로 되어있는 농업 정책자금을 2% 포인트 하향 조정하여 평균 1%대로 낮춰 농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다.

o 추가 소요예산은 약 2천억원 정도인데 해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생하는 불용액 약 2조원 정도의 범위에서 활용하게 되므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은 없다.

3. 기타 홍준표 후보 주요 농정공약

o 홍준표 후보는 이러한 2개의 농정관련 핵심공약 외에도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미만의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3년 간 평균 농업소득 1천만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실시키로 이미 발표한바 있다.

o 이와 아울러 농업인 월급제를 전국 농가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전체 농가 중 농협 출하 약정체결 농가를 대상으로 2월에서 11월까지 10개월간 월 50만원의 고정금액을 지급하여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의 수입을 년간 고르게 하여 자금 운용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o 한편, 고령 농업인 영농은퇴 수당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령 농업인이 은퇴하더라도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만 70세를 농업인 정년으로 정하고 이들이 소유 농지를 젊은 농가에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80세가 될 때까지 농가당 매월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1〕 공약명 :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여 쌀값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쌀 생산성 향상, 소비감소로 쌀 시장 공급과잉 및 쌀값하락 문제 - 정부양곡 매입 및 재고관리 비용, 쌀 직불금 등 재정 과다 투입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하** - 시장격리 등 정부매입, 쌀 직불제를 통한 소득보전 등 **사후조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전적 수급안정 조치가 미흡**
세부내용	□ 쌀 적정생산 유도를 위한 **생산조정제 도입(또는 변동직불제 생산중립화) 및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등 추진 - 쌀 이외 타작물 재배 시 소득차 보전(생산조정제) 또는 타작물 재배 시에도 변동직불금 지급(생산중립화) - **목표가격 변경 산식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목표가격 합리화** * (현행) 변경 목표가격 = 기존 목표가격 × 수확기쌀값 변동률 → (변경예시) 기존 목표가격 × [(수확기쌀값 변동률×0.5) + (물가상승률×0.5)]
타당후보 공약 및 당 공약	□ 더 민주당 문재인후보는 18대부터 **목표가격(쌀값) 21만원 수준 보장을 주장** □ 18대 대선에서 쌀고정직불부금을 7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을 공약, 우리 당은 생산조정제 도입을 요구해 옴
추진계획 〔예산 및 법안 등〕	□ **(생산조정제)** 3만ha 추진 시 약 900억원 소요(평균 300만원/ha) □ **(목표가격 산식변경)**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 **(기대효과)**시장격리 요구 등 감소로 **정부양곡 매입·관리 비용 절감**,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절감** ⇒ **절감 예산을 농업 경쟁력 제고 등에 투입**하여 농식품 분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2) 농업인 월급제를 전국 농가로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안정되게 지켜 내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농업인의 **소득이 수확기에 집중**되어 **안정적인 생활과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매월 일정 수준의 고정된 수입이 필요
세부내용	○ **(개요)** 농협출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농협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 비용을 지원** ○ **(대상)** 전체 농가 중 **농협 출하 약정체결 농가** ○ **(지급기간)** 2월~11월(10개월) ○ **(사업량)** 1차 년도 : 전체 농업 경영체의 5%(79,489 경영체) * 시범사업 시군의 참여농가 비율이 3.3%인 점을 감안 ○ **(예산)** 월50(만원)×10(개월)×0.05(이자율)×79,489(경영체) = 200억원 * 사업비 198억 7천만원에 사업 운용비 포함한 금액
당 공약	○**(18대 대선공약)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20대 총선공약)** 농업수입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 확충
타당후보 공약	○(문재인) 농업인 월급제 확대를 농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문재인 공식 블로그, 2.22)
대책 (예산 및 법안, 기대효과 등)	○**(예산)** 보통교부금 증액('17년부터 '20년까지 약 947억원 증액) - **예산 추계**(전년대비증액분 / 단위 억원) <table><tr><th>'17</th><th>'18</th><th>'19</th><th>'20</th><th>총</th></tr><tr><td>200</td><td>250</td><td>300</td><td>300</td><td>1,050</td></tr></table> ○**(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19조의 2에 국가의 지원근거 마련(현재 지자체 지원근거는 마련) ○(기대효과)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이 발생,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

(3) 고령 농업인이 은퇴하더라도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상황**에서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 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핵심과제 - 전체 농가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고령농가의 소득 문제 해결이 중요 * **경영주 65/70세 이상 농가** 비율 : ('10년) 46.4%/30.9→**('15) 53.5%/37.7** * 경영주 70세 이상 농가의 농업소득은 '15년 기준 **840만원** ○ **퇴직 수당과 연계된 농업인 정년제를 도입**하여 영세고령농의 **은퇴 및 소득 안정**을 유도하고 이들의 소유 농지를 65세 이하의 전업농·신규농에게 **유동화 시켜 농업 경쟁력 제고 필요**
세부내용	○ **농업인의 정년**을 정하고 정년에 은퇴하는 농업인에게는 일정 기간 퇴직연금 성격의 **수당을 매월 지급** - **(정년연령) 만 70세를 농업인 정년**으로 설정 * 65세는 현재 농업의 주축인 현실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고, 75세의 경우 자연 은퇴 연령에 가까워서 제도의 실익이 적음 - **(지원자격) 10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만 70세 농업인 * **시행 2년 간은 70세 이상 75세 미만 농업인도 대상**으로 인정 - **(수당)** 농업인이 은퇴한 **농가 당 매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 * 0.5ha 미만 소농의 경우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도에 따르면 최대 월 12만5천원씩 받을 수 있었던 점 감안 - **(지원조건) 영농 은퇴**(소유 농지를 젊은 농가에 매도 또는 임대) * 농지를 소유하지 않았던 농업인도 영농 은퇴 서약서 등 조건으로 지원 - **(지급기한) 자연 은퇴 연령*이 75세**인 점과 가입 유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80세로 지급기한 설정**
추진계획 (예산 및 법안 등)	○ **(예산)** 경영주 연령 70세-74세 농가 전체(165,210)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참여율 30% 가정 시 **첫해 약 1,784억원 소요** 추정, 다음 해부터는 **매년 70세가 되는 농업인이 지급 대상에 추가**** * 165,210농가×360만원×참여율0.3 = 약 1,784억원 ** 34,172농가(65~69세 농가수의 1/5)×360만원×0.3 = 약 369억원 '18: 1,784억원 / '19: 2,153억원 / '20: 2,153억원 / '21: 2,153억원 / '22: 2,153억원 / 총: 10,396억원 ○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 규정 신설 ○ (기대효과) 영세 고령농의 **소득 안전망 확충** 및 농업구조개선 통한 **경쟁력 제고**

(4) 청년농업인 직불금 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의 활력 증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농 유입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 필요** -'15년 기준 65세 이상 농업경영주 비율이 53.5%로 농업인구의 고령화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젊은 인력의 농업분야 유입이 시급한 상황임 - 청년농업인 직불금 도입 시 젊은 인력의 농업 유입 및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세부내용	□ 일본의 **청년 취농 급부금**과 EU의 **청년농업인직불금**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모델 개발** ○ 일본은 만 45세 미만의 창농인에게 **연간 150만엔(최대 5년) 보조금** 지급 - 지급조건: **영농계획 심사**, 농지 및 주요 농기계 소유·임차, 본인 명의 **농산물 출하 실적**(계좌), **경영장부등을 검토**, ○ EU는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시설자금으로 **55,000유로의 제공**(보조금 또는 대출), **최장 청년농업인직불금* 지급(최대 5년)** * **프랑스** 청년농업인 직불금: 농업관련 학교 졸업자 및 교육이수자(2년이상)에게 **ha당 70유로, 최대 34ha(2,380유로)까지 지급**
당 공약	(18대 대선) **영농후계자 양성체계 구축** 및 인턴제도를 비롯해 창업농에 대한 지원 강화
타당후보 공약	ㅇ(국민의당)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대선공약 채택여부는 미확인**
대책 (예산 및 법안, 기대효과 등)	□(예산)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의 청년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에게 3년간 평균 농업소득(1천만원)을 지급할 경우 360**억원/연 소요** * 1,200명(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의 연간 후계농 선정인원) × 1천만원 × 3년마련 □(기대효과) 영농초기 생활자금 및 금융비용 충당자금 마련으로 **농고·농대 졸업생 등 청년층의 영농창업률 및 영농정착 제고** 기대

(5) 농촌에 부족한 인력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인력수급 지원체계는 모든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력수급 지원체계는 미비**한 실정 - 산업화·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농업·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작업환경 및 근로여건이 열악하여 **농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 저조**
세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활한 농업근로인력의 양성 및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근로인력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령 마련** - 농업근로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근로인력지원센터로 지정·운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를 결정하는 경우 **농업 분야에 우선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농업근로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업근로인력 양성사업** 등의 사업 추진
당 공약	○(18대 대선)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설립 ○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활한 인력조달시스템 구축이 필요**(이완영, 김성찬, 권석창의원 '16.6, 상임위) ○ 농업근로인력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권석창의원) * 농업 고용인력 공급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령 마련 필요
타당후보 공약	○ 타당후보는 언급한 적 없음. 다만 더민주당 위성곤의원이 농업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농협인력중개사업 내실화** 등 지원 대책 필요 역설
대책 (예산 및 법안, 기대효과 등)	○ 농산업 분야의 **노동력부족은 농번기에 발생, 내국인으로는 한계**가 있음 -우선, 내국인에 대한 인력 중계서비스, **파견근로자에 농업도 포함**하는 방안 필요 -또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체계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법령 필요** ○ **(법안)**「농업근로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기대효과)**농업근로인력을 양성하여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농업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 조성**

〔6〕 농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농업 진흥지역을 정비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토지들이 많아 거래도 안되는 등 **사유재산 활용에 큰 규제로 작용** ○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도 많고, 개발 등 제한이 많아 할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하는 땅들도 있으나 농사로 인한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농업진흥지역으로 규제를 받는 대상 상당수
세부내용	○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대상과 면적 확인 후 실질적 농업진흥지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
당 공약	○ 쌀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적극 해제**하고, 해제지역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
타당후보 공약	○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철저히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임 (출처 : 더불어 민주당 정책현안보고서 '16.6.24)
대책 (예산 및 법안, 기대효과 등)	○ **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및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 완료('16.11.29) ○ 국토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 여건상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농지전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연간 약 12천ha의 농지가 전용**되고 있으며, 한번 전용된 농지는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非可逆性)으로 농업진흥지역 **전면 해제는 추진하기에 어려움** ○ 지나친 해제는 농지 값 인상, 농지의 투기화 등이 우려 되므로 우량농지가 아닌 여건 변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아진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해제하는 것이 필요

〔7〕 간척지를 농식품 수출 및 창업기지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출 농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농림축산주요통계에 의하면 **농업생산과 농촌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추세**,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 농업생산액 : ('01) 32조 3,831억원 → ('15년) 44조 5,188억원 - 농가인구 : ('01) 403만명 → ('15년) 108만 9천호 - 농업소득 : ('01) 1,126만 7천원 → ('15년) 1,257만 원 ○ **농업투자특구**는 산업단지 개념을 농축산업에 적용, 농촌을 **대한민국 창업기지로 육성**하자는 것으로 간척지에 **첨단 농업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필요
세부내용	○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투자자로 구성해 대규모 임대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는 간척지*에 **첨단 농업시설을 투자,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20년까지 13만5천ha의 간척 농지를 조성할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70%인 9만5천ha 준공(준공 간척지 중 8만7천ha를 매각, 1만3천ha를 임대) - △첨단 시설원예 △스마트팜 △저장창고 △유통망 등 관련 기술력이 집약된 농업·축산업특구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 쌀 **중심인 농업산업에서 탈피**해 다양화된 **친환경 고품질 농작물 재배** ○ **순환에너지를 활용한 투자특구 시설유치**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투자특구의 핵심인 에너지를 기준으로, 열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농업, 열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축산업을 유치 ○ **첨단 기술력과 위탁 양축(養畜)을 활용**한 **친환경 고품질 축산업** 육성 - 동물복제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쾌적한 환경의 축사를 만들어 AI 등 각종 전염병을 방지하고, 산업특구 내에서 생태계를 육성 - 양계장의 유기질 비료를 활용해 그 부산물로 사료를 만들고 그 사료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선진국의 순환 방식 도입 - 돼지, 닭 등과 같은 양축은 위탁 추진: 양계와 돈사도 간척지로 와서 친환경으로 추진할 경우 충분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
당 공약	○(18대 대선)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축산분뇨의 고품질 비료화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적극 지원 ○(20대 총선) 농수산식품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타당후보 공약	ㅇ문재인후보는 18대 시절 IT융합환경 개선으로 미래농업기반 구축 주장
대책 **(예산 및 법안, 기대효과 등)**	ㅇ정부가 현재 간척지를 **쌀 중심에서 친환경 고품질 및 수출지향 농산물 재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간척지 종합이용계획 수립 중** -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투자자로 구성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간척지 농어업적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은 '17년 3월말 수립 예정** - 새만금 5공구내 700ha를 **농업특화단지로 조성하여 고부가가치의 시설농업, 일반원예 및 자연순환형 축산단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 * '17년 3~4월까지 사업자 공모계획안을 마련,**사업자 지정 예정**(6월말) ㅇ새만금 농업특화단지의 성공모델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간척지에 확대 ㅇ다만, 대기업이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함. 대신 유통 수출 가공 R&D투자 등에 한하고 생산기반구축은 대기업이 담당. 농업투자특구보다는 **농업특화단지로 변경할 필요** - **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중기청 소관)에 의해 육상의 땅에서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 **규제 및 규제 권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자체 등이 주도하여 추진** - **특화단지**는 공유수면의 간척지를 준공 이전(일부 준공 후도 가능)에 사업유형(간척지 활용사업 ;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등을「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해 추진 ㅇ(기대효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투자를 통해 침체에 빠져있는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

[8] 농촌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3.2%인 656만 명으로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해 약 220만 명 증가 ○ 이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2018년에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고 8년 후인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예정** * 일본이나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 시간인 12년, 39년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령화 진입 ○ 앙헬 구리에 OECD 사무총장도 이미 2012년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의 고령화 현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역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노인복지법 65세)** UN을 비롯한 각국에서 고령화의 기준으로 65세를 사용 - '65세' 기준을 적용해 지방의 고령자 문제를 분석하기보다는 준고령자(50~54세), 초기고령자(55~64세), 중고령자(65~74세), 초고령자(75세 이상)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해 진단하는 것이 필요 ○**(통계청 자료 활용)** 통계청의 주민등록 인구 데이터와 전입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령자 그룹별로 다양한 거주패턴이 나타났음 - 50~54세 그룹은 경제활동이 활발하며 주로 산업활동이 밀집한 대도시와 수도권에 분포 - 55~64세 그룹은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이 본격적인 은퇴를 경험하는 고령자층으로 경제활동이나 요양기관과 상관없이 주로 거주비용이 저렴한 대도시 주변지역에 집중 - 65~74세 그룹은 건강 등의 이유로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초기고령그룹과 마찬가지로 주로 청주, 김해 등 대도시 주변지역에 집중 - 75세 이상 그룹은 실질적 황혼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건강(요양병원)과 관련해 거주지가 결정되므로 고용과 노동보다는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함 ○**(일본 고령인구 유치 사례 참조)** 일본은 2007년부터 단카이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이들은 일본 전체 개인소득의 10%를 차지하는 자산력과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성향으로 침체된 일본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세부내용	○현행 65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3년 이상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가능 농지연금의 **가입기준을 주택연금과 동일한 60세로 하향해 조기 귀농·귀촌을 유도** ○도시지역에서 이주하는 귀농·귀촌 인구에 대 해서는 3억 원 이하 주택에만 허용되는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기준 완화**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지원 ("지방교부금"을 차등 지급)**
당 공약	○(20대총선)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지원 및 자금 공급
대책 (예산 및 법안, 기대효과 등)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은퇴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귀농·귀촌 유도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은 부적합** - 법령상의 고령농 사회보장 지원연령 기준(65세 이상), 경영주 평균연령(66.5세) 및 가입연령 완화시 월지급액 감소에 따른 노후생활 보장 취지약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바람직** ○(주택)농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귀농·귀촌 진입장벽 완화 필요. 다만, **조특법 개정사항으로 기재부 협의 필요** * 귀농귀촌주택리츠(LH) 시범사업 주택 가격(2억 5천) 등을 고려 정책 일관성 확보, 귀농귀촌인의 주거 선택권 확대를 위해 농어촌주택 취득가액을 현실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의견 제출('17.4. 기재부), 기재부 협의 ○(귀농귀촌)정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수립된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16.11)을 내실화 추진 중 - 교부금 :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자체의 귀농·귀촌 유치 활동 장려할 수 있어 바람직 * 도시민농촌유지지원사업 평가 후 활동 결과 및 노력도에 따라 재정 지원 확대하고,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방안 협의 추진

〔9〕 가축전염병을 효과적 대응하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권 만으로는 신속한 방역조치에 한계 노출
세부내용	○ 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
대책 〔예산 및 법안, 기대효과 등〕	○ (법안)국내 구제역·AI 발생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 개정 추진 중**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인 검역본부장의 현장대응 역할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방역조치 이행 지시권한 부여** *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16.12.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17.2.23)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결('17.2.28)「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추진 ○ (기대효과)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축산업 분야의 피해 최소화

(10)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농식품수출 개척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농식품 수출이 일·중·미에 집중(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50% 수준)되어 해당 국가의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수출액 변동 위험 존재 * 일본의 엔저 장기화로 인한 수출 감소('12년 1,407백만불→'16년 1,159), 중국 반 부패 정책 시행 등으로 인삼·화훼 수출 감소 - 안정적 수출 수요를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 ○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과 수출업체를 매칭하고, 열정과 창의성 있는 청년을 통해 시장개척 업무 추진 필요 * '16년 청년실업률은 9.8% 수준으로 1999년 통계치 작성 이후 최대치
세부내용	○ **(청년 해외개척단 운영) 미취업 청년 중 해외 개척단을 선발**하고, 무역실무 및 현장 교육 후 **농식품 수출 요원으로 활용** - **(개척단 선발)** 어학 능력을 갖춘 무역·마케팅·농업 등 전공자 선발 * 현지 언어구사력·문화이해도가 높은 현지 대학생·교민 등 포함 - **(교육 운영)** 농식품 수출절차·무역 실무 등 집중 교육(2주), 수출업체 현장 실습(2주) - **(파견)** 인도·미얀마·이탈리아 등 시장 개척이 필요한 20개국 대상 상반기·하반기 각 1회 파견(3개월, 총 1,000명) * KOICA, KOPIA 등 기존 현지 파견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청년-수출업체 매칭)** 신시장 개척을 원하는 **수출업체와 청년매칭을 지원**하여 **정보조사·바이어 발굴 등 추진** ○ **(취업 지원) 수출 거래 성사자** 대상 **인센티브 지급**, 우수 개척단 대상 **매칭업체 일자리 알선, aT인턴 채용시 가점 부여 등 지원**
대책 (예산 및 법안, 기대효과 등)	○**(예산)**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예산 활용('17년부터 '20년까지 약 300억원 증액) - **예산 추계**(단위 억원) '17: 30 (100명) / '18: 90 (300명) / '19: 90 (300명) / '20: 90 (300명) / 총: 300 ○(기대효과) 열정과 역량 있는 청년들을 농식품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 파견하여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11〕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에는 경관, 생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유·무형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높음 ○ 깨끗한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농촌의 내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농촌을 국민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인식전환 필요
세부내용	□ 가치 있는 유·무형 자원을 디자인하여 지역주민,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 * DREAM : D(Design), R(Refresh), E(Energetic), A(Amenity), M(Manpower) ○ 자연(물, 동식물 등) 및 역사문화(건축물, 축제 등)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표 브랜드 발굴 ○ 폐교, 빈집 등을 체험·휴양 등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활용 ○ 지역자원을 체계화하고 도농교류 활성화, 주민의식 선진화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 홍보 등 역량강화 지원
대책 〔예산 및 법안, 대효과 등〕	□ 지역주민 및 도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농촌공간 조성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현재 유·무형 자원활용, 거점-시설 연계 등 공간 디자인을 활용한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추진 중(~'20년)** * 협업 지원형 10개소(개소당 40억원), 지자체 자율형 70개소(개소당 5～10억원)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연계지원에 따라 개소당 50억원 소요 * (하드웨어) 주요시설 리모델링, 관광·휴양 등이 가능한 복합공간 조성 등, (소프트웨어) 지역 브랜드 개발, 컨설팅, 홍보, 공동체 활동, 역량강화 등

〔12〕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사 제도를 도입 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전업농,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과 같은 우수 농업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적 성과는 미비 □농촌은 인구구조·지역 특성으로 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지만, 현행 제도(행정사법) 하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기에 한계
세부내용	□(기본방향) 행정사 제도를 참고하여 농업·농촌 분야에 특화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칭)'농업사' 제도 도입 □(주요대상) 경영·기술 역량을 갖추고 농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의 전·현직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농협 등) □(주요업무) 농업농촌 관련 각종 정부·지자체 예산사업(직불금, 복지사업 등) 신청 서류 작성·대행, 경영체 DB 등록, 농업 관련 법령 상담·자문,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조사·확인(직불제 이행점검, 우수후계농 현장 조사 등) 등
대책 (예산 및 법안, 기대효과 등)	□ ①미래 농업인(경영마인드+공익적기능)의 모델 정립, ②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농사나 지어볼까?' → '전문직업'), ③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④효율적 농정 추진(선택과 집중)을 위한 체계적인 인적 인프라 구축 등 □ 농업 관련 공직자·유관기관 종사자들의 ①경험·재능 활용도 제고(퇴직후 일자리 창출 효과), ②농업·농촌 행정 서비스 제고 등 □ 농업인 자격제도 도입 검토 및 실행방안 마련('17.상)

〔13〕 농촌의 생활에너지 비용을 대폭 낮추어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농촌은 도시 대비 **생활 에너지 지출액 및 지출 비율**이 크며, 증가율도 높음 - 도시가스 보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가인 석유류 비중이 크며*, 개별 주택 비율이 높아 에너지 효율도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농촌vs도시 연료별 비중(%, '11년) : 도시가스 16.3 vs 42.2 / 등유 23.5 vs 6.1 ○농촌은 도시지역 대비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음** * ('10) 전국, 69.9%/농촌, 24.9 → ('11) 72.3/26.2 → ('12) 74.5/27.9 → ('13) 76.4/30.1 → ('14) 77.8/32.2 →('15) 79.1/34.5
세부내용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 되었던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농어촌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에너지 형평 제고 *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가스공사와 협의 필요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농어촌 산간·도서 지역의 에너지 빈곤층에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에너지 바우처 지급 검토 등 난방비 저감 지원 - 온실 등에 발전소 폐열, 지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으로 생산비용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도모 - 지열·해수열 등의 열원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 저압 접속용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당 공약 및 타당후보 공약	(18대대선)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대책 〔예산 및 법안, 기대효과 등〕	○**도시가스 주배관 시설 연장구간 확대** 및 공급관리소 신·증설 ○탱크로리 공급방식 확대 적용으로 **소규모 마을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농어촌 산간·도서 지역의 에너지 빈곤층에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기대효과)에너지 비용 절감 및 환경부하 감소, 대체 에너지 개발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조성

〔14〕 선량한 양축농가 지원을 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전국 축산농가의 약 52%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18.3.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해야 함 - '18.3.25일 부터는 무허가축사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이 강화됨 ㅇ (문제점) 범정부 무허가축사 세부실시요령이 '15.11.11일 전국 시·군에 시달되었으나,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건축법 시행령이 '16.2.12일 개정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무허가 적법화 기간이 부족한 실정임 - 일선 지자체 행정 협조 미흡으로 현장농가가 적법화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군별로 무허가 추진반을 구성토록 하였으나 구성 실적이 저조함 - 4대강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제한지역에 분포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이 없음. (해당 축산농가 생업포기 직면)
세부내용	ㅇ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 ~'21.3.24일까지 ※ 가축사육 거리제한 유예기간도 동일하게 연장 ㅇ 범정부 차원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대책 수립 - 전국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대책 수립 -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제한지역 대책 마련 - 축산 현실과 맞지 않는 축사관련 규제 및 절차 간소화

국민의당 농정공약

[목 차]

1	농어업 가치 재조명, 미래 세대의 식량주권 강화
2	안전한 먹거리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3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업 정책으로 활기찬 농산어촌

※ 편집자 주 : 반려동물, 해상 관련 공약은 삭제하였음.

“정약용의 三農정신”으로 안철수가 국민공감! 국민농정 실천하겠습니다.

목표1. 농・어업 가치 재조명, 미래세대의 식량주권 강화

‘농어업・농어촌・식품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식량주권, 식품안전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다가올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쌀 등 식량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은행 설립을 통해 방역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목표2. 안전한 먹거리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자라는 어린이를 위한 ‘건강 닥터’ 프로그램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협하는 식품사고를 근절하겠습니다

목표3.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업 정책으로 활기찬 농・산・어촌

4차 산업혁명으로 제2의 농업혁명 일으키겠습니다.

미래성장 식품산업 육성으로 식품 분야의 고용과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 하겠습니다

맑고 푸른 숲으로 덮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청년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족,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목표4. 반도를 넘어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

해양에서의 바다주권 확립과 평화・공존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상사고 근절을 위한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바다 쉼터를 조성하여 행복한 어촌을 만들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목표1. 농・어업 가치 재조명, 미래세대의 식량주권 강화

다가올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쌀 등 식량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곡물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농지면적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쌀 공급과잉으로 쌀값 하락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벼의 재배면적 감축 및 타작물 재배를 유도 중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대다수 농가는 벼 이외의 다른 작물 전환에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국정과제

- 식량주권을 위해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 강화
- 쌀 농가의 타 작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식량생산안정제 119 조치' 시행

* 논에 식량자급률이 저조한 콩, 옥수수, 밀 등을 식재할 경우 소득 감소를 최대 300만원/ha 지원

-1년(2018년 : 3만 ha) + 1년(2018, 2019년 : 6만 ha) 등 각각 연 900억, 1800억 투입 (단가 : 평균 300만원/ha)

- 국산 밀 생산 확대 유도를 위해 밀에 대한 공공비축매입 추진
- 국산 두류 생산 확대 유도를 위하여 비축수매물량 확대

실천계획

-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 면적을 산출하여 농지 관리 및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농지법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생산안정제 로드맵 마련

목표2. 안전한 먹거리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자라는 어린이를 위한 ‘건강 닥터’ 프로그램 시행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맞벌이 가구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 불균형적 영양섭취 등 잘못된 식습관·식생활로 인한 비만·당뇨 등 ‘생활습관병’과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사회구조 변화, 농식품의 다양화, 어린이·청소년 편식 등으로 인한 우리 농수산물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한편, 저출산 기조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하여 우유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낙농업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정과제

-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과일닥터’ 프로그램 시행
  - 전국 돌봄교실 학생(초등1~2학년) 대상 과일 간식 지원, 관련 식생활 교육 실시
-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우유닥터’프로그램 시행
  - 학교우유 등 유제품 급식비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등 → 학교급식 지원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

실천계획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 등
- 축산발전기금 등 필요 예산 확보

목표3.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업 정책으로 활기찬 농·산·어촌

4차 산업혁명으로 제2의 농업혁명 일으키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농업·농촌 분야도 스마트 팜 등 생산 분야 중심으로 기초적인 정책과 R&D를 추진 중이나 전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새롭게 부각되는 기술과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농림축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과제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R&D 추진
  - 핵심투자분야 선정 및 R&D 역량 집중
  - ICT, 로봇, 공학, 바이오 등 타 분야와의 융합 연구 확대
- 농업과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 인재 육성
  - 예비농업인과 농업인 교육과정을 첨단 기술 중심으로 개편
-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 첨단 생산시스템 확산
  - 인공지능형 스마트팜 개발·확산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농업 유통 및 수급 관리 개선
  -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주요 작물 수급 예측 시스템 개발
  - 지능형 스마트 유통 시스템을 활용한 농수산물 출하시기 결정 시스템 개발

실천계획

- 농식품분야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세부과제 선정과 예산 확보

맑고 푸른 숲으로 덮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경제적·환경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주요 국가 자산이나 녹화된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구의 92%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생활권 녹색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며,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건전한 산림 여가·휴양 공간이 부족합니다.
- 산촌은 국토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3% 미만으로 산촌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은퇴·귀산촌 수요를 적극 흡수해야 합니다.

국정과제

- 도시를 숲이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숲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 산림을 기후 변화에 대응한 국가온실가스 감축원과 경제 자원으로 적극 활용
- 국민 누구나 숲에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산림 여가 공간 확충
- 임업인과 산주의 소득안전망 강화 및 산촌을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재창조
  - 임목재해보험, 산지연금 도입 검토
- 산림교육, 휴양, 치유 등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
  - 숲 유치원 등 유아·청소년 숲 체험 기반 확대와 산림교육 전문가 배치
- 드론, 위성,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 체계 구축

실천계획

- 임업진흥법, 산지관리법, 산림휴양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산림복지단지 등 분야별 시범사업 추진과 확대

바른정당 농정공약

[목 차]

1	농어업인 주권시대, 농어업인과 소통하는 농정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	농어촌 복지확대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	농어촌 관광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	직불제 개편 등 농가소득안정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5	쌀 생산조정제 도입 등 쌀 수급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	청년농업인을 유치, 농정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7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농정체계를 구축하여 농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8	방/검역·안전·진흥 일원화 체계를 구축, 농식품 안전 및 진흥을 책임지겠습니다
9	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업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10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확대로 식량·자원·수출 전진기지를 확보하겠습니다

"농업인 주권시대!,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농업의 GDP비중이 2% 이하로 떨어지는 등 완전히 산업화된 국가로 변화
- 농산물시장은 완전 개방되어 소비자가 국내외에서 생산 공급되는 모든 농산물을 선택하여 소비하는 시대

❍ '95년 시장개방 이후, 대략 20여년간 우리 농업은 직불제라는 응급처방에 의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
- UR타결 20년, 한-칠레 FTA 비준 10년이 지난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농가 계층간, 도-농간 양극화 심화, 실질 농가소득 하락 등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
- 또한, 시장개방으로 곡물자급률('15년, 23.8%) 하락 등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이 위협

❍ 농어촌 인구의 급감에 따라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하락, 농어촌이 붕괴되는 수준
- 농어촌지역의 경영주 평균연령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고령화가 심각, 청년농업인 등이 없는 3無시대
-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기초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곤란

❍ 우리의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고 미래산업으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 농업은 생명체를 생산하는 유일한 산업, 농촌은 생명체를 키우고 보존하는 공간
-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은 시장개방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제 곡물가격 폭등은 곧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특성
- 농업은 자연친화적 친환경 산업이자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첨단과학기술과 접목시, 바이오, 식품분야 등 무궁무진한 발전가능한 미래산업

❍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시장 개방과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변화된 여건을 감안, 농업·농촌에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통해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해 나갈 것임

- 농업·농촌 정책공약은 실현가능하지 않은 장밋빛 미래상의 제시나 농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럴 듯하게 포장된 구호성, 선심성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 현재 한국 농업과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농업·농촌정책의 방향을 설정

❍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 농어업인이 농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농어업인 주권시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갈 것
- 농가 소득안정, 농촌복지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식품 안전체계 구축과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사람과 돈이 모이는 농촌', '농업선진국으로 도약'을 이루어 낼 것

❍ 이를 실천하기 위해, 4개 분야 10대 공약을 제시

1. 농어업인 주권시대, 농어업인과 소통하는 농정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제10차 헌법 개정시 농식품인 주권개념, 농업환경과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 국민 영양·식생활 교육 중요성, 통일농업 등 반영 추진

❍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을 지방정부 중심의 상향식 농정으로 전환하고, 모든 주요 농정에 농어업인, 식품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농어업인 주권시대를 열어나갈 것
- 농식품인·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도, 시·군 단위 농소정회의소 협의체 구성·운영하고, 지자체 지원 포괄예산 확대 등 지자체·고객중심의 지원체계 전환

❍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식품인, 단체,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농식품 미래성장특별위원회'를 설치

2. 농어촌 복지확대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읍·면사무소를 농어촌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등 읍·면소재지를 문화, 교육, 보육, 의료서비스 거점으로 중점 육성

- 읍·면의 생활권별 보육시설 1개 이상 설치, 1면 1초중등학교 원칙, 원격진료 등 스마트 의료시스템 구축 등
- 농어촌 주거, 교통, 가스 등 생활환경 개선, 여성농어업인 지원 대폭 강화

❍ 마을회관을 영유아보육시설, 공동급식, 작은 영화환 등의 역할을 하는 '마을복지회관'으로 단계적 전환

3. 농어촌 관광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농어촌 지역에도 농촌 난개발 방지와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도시계획처럼 계획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가칭) '농어촌지역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어촌 관광특별지구 제도 등 도입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을 재정비하고 외국인 체험마을 등 특성과 차별성을 갖춘 '1읍·면 1관광특성화마을'을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추진

❍ 농어촌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 농외소득 제고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가칭)' 농어촌지역 친환경기업 유치 특별법'을 제정, 진입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조세 특례 등 추진
- 농촌 마을기업 육성, 농식품 가공공장 등 창업 및 활성화 지원

4. 직불제 개편 등 농가소득안정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현재의 직불제의 생산연계성을 완화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전면 개편

-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직불제는 통·폐합하고, 지급단가를 단계적으로 높여 농가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

❍ 안정적 영농과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5대 소득안정정책' 추진

- 농어업수입보장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 농업경영관련 3대 보험 제도보완 및 지원 대폭 확대
- 품목별 자조금 조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품목 중심으로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제외하거나, 적용 기준 상향 조정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5. 쌀 생산조정제 도입 등 쌀 수급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생산측면) 타 작목 수급영향을 최소화하는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 및 생산 중립적인 방식의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 추진

- 고품질 쌀 품종 보급 확대 및 친환경 쌀 재배 확대를 통한 쌀 고품질화에 주력

❍ (소비측면) 쌀의 산업용(가공용) 활용을 위한 투자를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 추진

- (가칭) '쌀 가공 상품화 연구소' 설치 등 쌀에 대한 R&D를 대폭 강화

- 쌀, 쌀가루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
- 쌀 소포장 유통 및 쌀과 쌀 가공품의 수출 촉진, 해외원조 확대 및 남북 관계 개선시 대북 쌀 지원 검토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급정책 추진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마스터플랜' 수립

6. 청년농업인을 유치, 농정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 현재의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규모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치와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및 청년 귀농인에 인센티브 강화
- 한국농수산대학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확충(매년 100명 증원) 및 커리큘럼 봉완

❍ 농업 인력 양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농촌인력유치 및 양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7.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농정체계를 구축하여 농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가칭) '농식품 미래성장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 관계부처 참여를 통해 '농식품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계획' 수립·추진

❍ 농작물 재배와 농 작업은 물론 주거, 의료, 교통 등 전반에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마을 모델로서 (가칭) '스마트 농정 선도마을'을 5년간 전국에 50개 조성

❍ 선도마을 지원, R&D, 인력양성, 4차 산업기술 보급 등에 매년 평균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 집중 투자

- 창업과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 농식품분야 4차 산업기술투자 전용펀드 조성·지원

❍ 종자, 바이오, 핵심 소재분야(식품·화장품 등) 등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반려동물 관련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R&D 등 지원 강화

8. 방/검역·안전·진흥 일원화 체계를 구축, 농식품 안전 및 진흥을 책임지겠습니다.

❍ 생산에서 소비까지(Farm to Table) '국가 푸드 관리 시스템'을 구축

- 농식품 안전·위생·검역·검사와 가축 질병 방역 관리를 일관·통합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가칭) '농식품안전방역청'을 신설

❍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예방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등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발생시 초동대처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 조직' 강화 등 중앙-지방정부간 대응시스템을 정비

- 농가의 예방, 살처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축질병 공제'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가축질병보험'제도 도입 중장기 연구 추진

9. 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업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 신규 급성장 시장 및 성장성이 큰 중국, 할랄시장 등을 집중 공략하는 등 농식품의 수출확대 추진

- 신규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aT센터 해외거점망 확대, 해외 대형유통업체와 연계 강화,

첨단 원예수출 단지 조성(농업인·단체 참여형)검토 등

❍ (가칭)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특별법’을 제정,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가 식품산업 성장엔진 역할을 하도록 국가적 지원 강화

- 글로벌 식품기업 유치를 통해 농산물 원료-연구·제조-수출 플랫폼체계를 구축, 동북아의 식품산업 허브로 육성

❍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기능성식품 및 소스류식품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한식 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 ‘한식진흥법’ 제정, 푸드테크 창업 활성화 지원

- (가칭) ‘농식품상생기업’ 인증제도 도입 검토 및 세제지원 등 추진

정의당 농정공약

[목 차]

1	농어업소득과 농어민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2	국가책임농업으로 전환하고 농식품안전을 실현하겠습니다.
3	교육 주거 의료 걱정 없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4	농민참여 민주농정 실현하겠습니다.

1 농어업소득과 농어민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① 65세 이하 모든 농어민에게 농어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진단

- 2015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3,726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평균의 60% 수준임. 이 가운데 농업소득은 1,126만원(30.2%), 농업외소득은 1,494만원(40.1%), 연금과 직불금 등 이전소득은 790만원, 보상금 등 비경상소득은 311만원 수준으로 농업을 통해 농촌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임.

약속

- 65세 이하 남녀 모든 농어민 140만 명에게 월 20만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 65세 이상 농민들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② 직불금 개편으로 농민소득 양극화, 도농소득 양극화 해소

진단

- 2015년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소득은 3721만원이며.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7,739만원, 하위 20%의 평균소득은 622만원으로 하위 20%의 평균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15년 3인가구 최저생계비 1,632만원(월 136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소득임.
- 상위 20%의 농가가 전체 쌀 직불금 1조 367억원의 63%인 6,466억원을 수령한 반면, 하위 20%의 농가는 전체 쌀 직불금의 3%인 290억원을 수령한데 그침.

약속

- 논 고정직불금 ha 당 연 150만원 직급, 밭 고정직불금 ha 당 80만원 지급.
  - 1ha 미만도 최소 년 150만원 지급, 직불금 상한선을 책정하여 경지규모 증가에 따라 직불금 지급단가를 축소(농지 규모에 따라 직불금 역누진제 적용).

③ 품목별 생산가격보장제 도입

진단

- 전국의 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실시하거나 준비중에 있으나 농림부 등 정부에서 이를 반대하여 최저가격보장제도 확대에 어려움 봉착.
- 농축산물 생산 및 출하를 농가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 발생.

약속

- 매년 농축산물 생산비 및 재생산비를 반영하여 농촌진흥청이 품목별 생산가격 발표.
  - 지자체에서 최저가격보장조례 실시할 경우 정부가 유통지원기금 적립의 20%을 지원.
- 농업경영체등록을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고 생산 · 출하 단계별 유통명령에 따른 지원.

④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진단

- 기후변화, 초국적 곡물메이저의 식량독과점으로 국제곡물가 급등.
- 쌀, 밀, 보리, 콩, 옥수수 등 기초농산물 품목별 자급목표치가 설정되지 않아 곡물자급률 30% 달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노력이 없음.

약속

- 기초농산물 품목별 자급목표치 설정. 품목별 자급목표치 달성을 위해 곡물류부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실시. 향후 채소류, 원예, 축산물 등으로 사업대상 품목 및 부류 확대
- 5년 내 쌀, 보리, 콩, 옥수수는 자급률 목표치의 30%, 밀은 10%를 수매. 국가수매는 농협, 품목별자조금 등에 위탁.

⑤ 마을공동체기업 등 중소농 협업공동체 육성

진단

- 2015년 경지 규모가 1.0ha 미만 농가가 74만2000가구(68.1%)로 다수를 차지. 고령화로 인해 개별 농가 중심의 영농은 비생산적이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식품 가공 · 유통 등 새로운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이 어려움.

약속

- 마을공동체기업 등 중소농 협업체의 생산물(농축산물, 가공품 등)에 대한 공공급식, 농식품복지바우처 등의 공적조달에 우선 구매 적용.
- 마을공동체기업 등 종소농 협업체의 경영자조금 단계적 지원
  - 중소농 협업체 정관에 따라 농가에 지급하는 각종 직불금 수급 주체로 인정.

⑥ 농업재해보험 확대로 농가 경영불안 해소

진단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가경영에 큰 피해를 줌에 따라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미흡하여 규모화 · 전업화 된 농업경영체가 피해를 극복하고, 다음해 농업재생산 능력을 확보하기에 미흡.

약속

- 농업재해보험 가입대상을 확대, 대상 품목도 과수, 밭작물, 벼, 축산 등으로 대폭 확대.
- 보험금 지급 대상도 강풍, 우박, 한해, 냉해, 설해, 집중호우 및 전염병 등으로 확대.
- 농업재해보험 농가 자부담을 10%로 낮추고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로 조정.

2 국가책임농업으로 전환하고 농식품안전을 실현하겠습니다.

①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로 식량주권 실현

진단

- 2015년 기준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3%, 식량자급률도 50.2%로 매년 하락.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식량자급 목표치는 품목별 자급목표치를 설정하지 못하고, 목표치를 실현할 적정 농지 및 농업인 등 확보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함.

약속

-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반영하여 2020년까지 30%, 중장기는 50%로 설정. 법률적 의무로 강제
  - 농업발전기본계획에 품목별 자급률 목표 설정, 이행실적 등 국회 보고 후 예산 반영.
-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생산조정제 실시. 총체벼 등 조사료 생산 지원.

② 농지 공개념 강화로 식량자급 기반인 적정농지 확보

진단

- 2015년 경지면적은 논이 90만8천ha, 밭은 77만1천ha로 총 167만9천ha로 역대 최저 수준. 곡물자급률 32%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농지는 175만ha이며, 자급률 4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94만ha가 필요.

약속

- 식량자급율 목표 및 통일농업 대비 농지총량 목표치 법제화, 농업진흥지역 확대.
- 비농민 농지 소유 요건 강화.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비농민 농지보유세를 신설.

③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청년취업농 정착지원제도 도입

진단

- 20세 ~ 50세 해당하는 농가의 수는 2015년 52만가구에 불과.
- 정부의 농업인력육성은 매년 1,500명 내외로 당초 목표치 5,000명에도 미달.

약속

- 18세 ~ 40세 이하 신규 청년취업농 2만명에게 5년간 청년취업농 정착지원금 지급
  - 신규농업인력 10만명에게 준비기간 2년 월 150만원, 정착기간 3년 월 100만원 지원.
  - 신규 청년취업농에게 농업기술센터 관리 하에 농가위탁 영농교육 실시.
  - 청년취업농 정착지원금 수급기간에 비례한 의무영농 복무기간 부여.
  - 영농정착 중도 포기자는 수급 및 복무기간 산정한 지원금 상환.

④ 귀농·귀촌인 지원 강화로 농업인력 육성

진단

- 2015년 귀농은 1만2천950가구, 귀촌은 31만7천409가구로 전년에 비해 10.9%와 6.0%가 늘어났으나 교육훈련 프로그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여 귀농 전 교육이수지원 2800명, 선도농가 실습지원 517명에 불과한 실정임.

약속

- 귀농정책과 귀촌정책을 분리하여 청년취업농 정착지원과 마을공동체기업 등 협업공동체 일자리 연계로 귀농 · 귀촌 대상자의 기술과 재능, 경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농업기술센터 등을 거점으로 한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⑤ 대북쌀지원특별법 제정 및 남북농어업교류협력

진단

- 한 해 쌀 생산량은 433만t이며 소비량은 370만톤으로 심각한 재고문제와 가격폭락 야기.
- 남북은 2005년 6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 합의. 2005년 8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의 농업분야의 협력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약속

- 대북쌀지원 특별법 제정 및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가동과 남북공동식량계획을 수립
- 남북공동어로구역 합의 이행, 중국 불법조업 공동 대응

⑥ WTO, FTA 관련 농업피해영향평가 및 대책 마련

진단

- 2016년 12월 현재 53개 국가와 FTA를 체결. 한·미, 한·EU, 한·중 FTA가 농업생산액 감소에 미치는 직접 피해액은 15년간 최소 43조원 이상.

약속

- 「통상절차법」을 개정하여 통상절차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과 검증시스템을 강화
- FTA 농업 피해영양평가 실시, FTA재협상을 추진. 농업·먹거리 등은 통상협상에서 제외

⑦ 무역이득부담금제로 농업 피해보전 의무화

진단

-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상생기금'(매년 1천억원, 10년간 1조원)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자발적 출현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이 없음.

약속

- 시장개방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에게 목적세 부과하는 방식으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⑧ 학교·공공급식 기초농산물 지원, 친환경농산물 확대

진단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7.8%, 상대빈곤층은 11.5%가 빈곤에 노출.
- 단체급식 중에서 비상업적이고 정부 혹은 기업 등 에서 지원을 하는 급식을 통해 국민의 34%가 1일 1식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시설이 턱없이 부족.

약속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 단체급식에 친환경 국내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단체급식공급센터 설치 운영.
- 정부와 지자체의 단체급식에 국내 농산물 우선 사용 및 친환경 사용 비율을 확대.

⑨ 지속가능한 안전한 먹거리체계 구축

진단

- GMO를 포함 한 해 250억달러 농축산물이 수입되고 있고. 국내 농산물의 친환경 생산량은 전체 10%에 그치고 있어 먹을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담보하는 지역중심먹거리체계가 정착되지 못함.

약속

- 농업생산과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전환,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안전검사소 설치 운영.
- 농업기술센터를 생태친환경농업지원센터로 전환, 지역별 농어촌사랑 상품권 발급.

⑩ GMO 농산물 규제 및 토종종자 육성 지원

진단

- 2016년 기준 약 1,000만 톤 내외의 GMO 농식품을 수입. 전체 옥수수·대두 수입물량의 약 70%에 달함. 식용 옥수수의 50%(126만톤), 식용 콩의 85%(100만톤)는 GMO 농산물임.
- 농어촌진흥청 등 정부기관 및 대학연구소에서 약 180여종의 GMO가 개발되고 있음.

약속

- GMO 농산물이 원료로 포함된 모든 식품에 GMO표기 의무제 도입
-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종 다양성 유지
  - 토종종자의 보전과 육성을 위해 토종종자 유지 보급 농가 지정 및 지원

⑪ 수의방역국 설치와 공공수의사 확대로 가축전염병 예방

진단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되고 있으나 예방적 대응이 늦고, 지자체에 공공수의사가 없는 곳이 많아 전염병 예방과 예찰, 백신투약 등이 잘 전개되지 않음.

약속

-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방역국을 설치하여 예방과 예찰을 강화하고 시군에 공공수의사를 배치하여 사육환경, 정기 소독, 항체보유 등 상시점검시스템과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제도 확대

⑫ 모든 노후 연근해어선 기관교체, 어업안전 보장

진단

- 연안어선 44,713척 가운데 선령 13년 이상 17년 이하가 28%, 근해어선 2,714척 가운데 23년 이상이 27%, 대형선망어선의 경우 선령이 23년 이상의 어선이 약 92%로 노후화가 심각.
- 구명조끼는 「어선법」에따라 최대승선인원수만큼 비치의무가 있으나, 대부분 어선원은 조업 지장을 이유로 착용하지 않음.

약속

- 모든 노후어선 기관교체비용을 금리 1%로 단계적 지원
  - 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이전에 노후어선 기관교체 사업 완료
- 조업환경 적합형 구명조끼를 개발 보급하고 조업 시 착용 의무화 시행

3 교육·주거·의료 걱정 없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①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진단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통폐합된 소규모 학교는 총 246개교이며, 주로 농어촌지역에 집중되어 농어촌 교육환경이 심각함.

약속

-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하여 농산어촌 특성화 작은학교 유지, 교육시설 없는 지역 학생에게 기숙사 제공. 교원 임용과 근무조건 개선.
- 학교시설을 이용한 고령·여성·이주민 등의 다양한 교육요구에 부합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

② 농어촌마을 공동생활 지원 확대

진단

- 농어촌의 독거노인 수 36만 6800가구로 크게 증가. 만 65세 이상이 50%를 넘어선 한계마을도 급증. 한계마을에서는 농업생산 지속이 어렵고 전통적인 상부상조체계의 약화로 새로운 사회문제 대두.

약속

- 1마을 1 공동생활주택 운영,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년 200만원 지원.
- 된장, 고추장, 식초, 김치 등 '우리마을 전통농식품 공동작업장' 지원.

③ 지역 보건소를 민간 병의원 수준으로 시스템 구축

진단

-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이 없어 농어민 의료서비스 혜택 못받고, 의료비 부담도 큼.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115개소 중 5개소만 군지역에 있으며, 지역의료기관 응급실에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약속

- 30분 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거점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 시군 보건소에 물리치료 시설 및 인력 확충, 농부증 진료 확대

④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법 제정

진단

- 농업분야 재해율이 타산업 평균 재해율(0.6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데도 농가인구 중 1% 정도만이 산재보험의 혜택 받고 있으며, '농업인안전공제'의 경우 산재보험보다 보상수준이 낮으며, 요양과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 소득보장 수단이 없고, 보험료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음.

약속

-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노동재해보장법」 제정. 농업인의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재활시설 설치 운영, 요양급여, 농업노동결손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재활급여 등 지급.

4 농민참여 민주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및 농협개혁

진단

- 지역의 단위농협 조합장 직선 선출로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 선출 요구가 높아짐.
- 현행 농협중앙회 100% 출자 구조의 농협경제지주를 회원조합 및 품목별조합의 사업연합체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높음.

약속

-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지역농협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
- 중앙회를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연합회로 재편하고 연합회(지역별, 품목별) 중심의 사업체계 확립.

② 여성농업인 지위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진단

- 농가인구 중 여성은 148만 명 51.1%이고, 농업 주종사자 중 여성이 53%를 차지. 농사일 50% 이상을 담당하는 비중이 66.2%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사노동의 75%를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이 시급함.

약속

-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어업인 정책담당관 배치 의무화
-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 각종 위원회에 여성농민 참여율 30% 이상 의무 보장
- 전통 농식품가공사업, 토종농사관련 지식 등 고령여성농민의 전통지식 자원화
- 여성농민의 삶의 질 높여내기 위해 여성농민행복카드 제도 확대(의료, 문화생활 이용)

③ 농업회의소 법제화 및 농민참여 협치농정 실현

진단

-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며 농·어업정책을 민관이 공동 결정하고 책임지기 위해 농업회의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도화하고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로서 대표성을 부여할 필요.

약속

- 농업회의소법 제정으로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협치농정 실현

2. 주요 정당 정책 협약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잘 사는 농업인, 행복한 국민 실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계획

1 행사개요

❍ 일　　시 : 2017. 5. 2(화) 14:00～14:50

❍ 장　　소 :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 주최・주관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협약대상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참석대상 : 20명 내외

-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정책위의장**, 농해수위(위원장+의원), 농어민위원회(위원장단) 등
- 한농연 : 한농연 중앙연합회 임원 등

○ 주요내용

- 더불어민주당-한농연 정책협약
- 한농연 중앙연합회 임원 간담회

2 주요 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05	○ 참석자 소개	
14:05～14:15	10	○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한농연 회장
14:15～14:20	05	**○ 농업・농촌 정책협약, 기념촬영**	-한농연중앙연합회장 -정책위의장, 농어민위원장
14:20～14:45	25	**○ 한농연 임원 간담회**	-농어민위원회
14:45～14:50	05	○ 폐회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 협약서

우리 사회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한 농업과 먹거리 정책의 실패로 자연 생태계와 국민의 식탁, 농업·농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밥상은 산해진미로 넘쳐나지만 먹거리 안전성이 가장 취약한 나라가 되었다. 농촌사회는 소득불안과 도농간 격차 확대, 지역불균형으로 활력을 잃었다.

국가농정의 기본 틀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무한한 가치가 존중받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2017년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한국사회와 농업·농촌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협치농정 실현
-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Food Plan) 수립 시행
-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 및 후계인력육성 강화
- GMO 표시제 및 식품표시제도 강화
-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및 공공급식 전면 확대
- 농협의 유통개혁을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
- 농어업재해보험 및 농어민산재안전보험 강화

- 책임있는 국가 축산방역 체계 수립
- 농어촌 교육·주거·보건·의료 복지체계 강화

2017년 5월 2일

제 19 대 대 통 령 선 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 재 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정책본부장 **윤 호 중** (인)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 장 **김 지 식** (인)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 원 장 **신 정 훈** (인)

자유한국당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 책 협 약 서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의미는 우리 손으로 '농민 대통령'을 뽑자는 것이다. 세계 농업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 농업여건도 분명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250만 농업인이 소외받지 않고, 국민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원들의 소명이다.

자유한국당과 한농연은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들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제19대 대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맺고자 한다.

-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국산 농림축수산물 제외
- ■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한 농업정책자금 금리 1%대로 하향 조정
- ■ '후계농업인 육성법' 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
- ■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실시
- ■ 고령농업인 노후보장을 위한 '영농은퇴 수당제' 실시
- ■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적법화 기한 연장, 절차 간소화
- ■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쌀 생산조정제 도입
- ■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 ■ 헌법 개정(안)에 농업 농촌의 가치와 역할 반영
-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식품안전청'을 외청으로 신설
- ■ 사회보험방식의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제' 도입

2017. 5. 2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이 현 재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 지 식

국민의당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 협약서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 지속돼 온 "신자유주의 농정"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의미가 있다.

국민의 당과 한농연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농업인이 잘 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 쌀 생산안정을 위한 식량생산안정제도 시행
- 청년직불제·생태환경보전 직불제 도입
- 1ha 미만 소농대상 직불금 30% 추가지급
-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곡물 공공비축매입, 비축수매물량 확대
- 미래성장 식품산업 육성 및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 동물복지형 친환경 농장 확대를 통한 건강한 축산물 공급
- 성장기 어린이 체질개선 및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건강닥터" 프로그램 도입
- 4차 산업혁명으로 제2의 농업혁명 완수
- 방역주권 강화를 위한 구제역 백신은행 설립
- 국민건강 위협하는 식품사고 근절
- 생산(수입)부터 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2017. 5. 2.(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조 배 숙·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 지 식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식 사진]

[자유한국당 정책협약식 사진]

[국민의당 정책협약식 사진]

3. 한농연 농정공약 반영 여부

10대 농정비전	60대 핵심 요구사항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국민의 당	바른 정당	정의당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걸맞는 정치적 위상 확립	①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		○	○	○
	② 미국식 "농업법" 체제 도입을 통한 5년 단위 농정 추진계획 법제화					
	③ "통상절차법" 개정으로 통상협상시 농업인의 요구사항 반영 의무화					
	④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소유·이용·보전 제도 전면 정비	○		△		△
	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농업계 직능 대표의 공천 의무화					
	⑥ 농어촌 대표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재조정					
	⑦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 신설·운영	○	○	○	○	
	⑧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으로 민관 협치 농정체제 구축	○				○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 농업생산구조의 유지·발전 방안	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	○	○	○	
	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제도 중심으로 농업인력 육성 정책 일원화					
	⑪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존치·확대					
	⑫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실시	○	○	△	○	○
	⑬ 제도권 및 민간 차원의 농업인 교육·훈련 시스템 전면 혁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의 정비·확충 방안	⑭ 전체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			△	
	⑮ 쌀소득보전직불제 변동직불금을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전환				△	
	⑯ 밭농업직불제 고정직불금 인상 및 변동직불금(생산 비연계 방식) 지급					○
	⑰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정비·확충	○		△	○	△
	⑱ 농업재해보험 및 수입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개선				○	○
민주적·책임 경영,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농협 개혁 방안	⑲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
	⑳ 농·축협 신용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호금융연합회" 신설					
	㉑ 농·축협 조합원 정예화를 포함한 민주적·책임경영 체제 강화					△
	㉒ 농·축협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조합원 교육 내실화					
	㉓ 6차산업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 지원 강화					
	㉔ "돈은 묶고 입은 푸는" 방식으로 조합장·임원 선거 제도 개선					

10대 농정비전	60대 핵심 요구사항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국민의 당	바른 정당	정의당
농업인의 삶의 질 증진 및 농촌개발 정책 발전 방안	㉕ 사회보험 방식의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제도 도입	○				△
	㉖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	△	
	㉗ 고령자를 포함한 농어촌 취약 계층 지원 제도 확충·정비	○	○	△	△	○
	㉘ 학습권 보장,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농어촌 교육 개선 방안	△		△	○	○
	㉙ 주민 접근성 강화 및 예방적 의료 강화를 위한 농어촌 의료체계 개선	○		△	○	○
	㉚ 농업인·농촌 주민의 생활용 에너지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 강화	△	○		△	
	㉛ 농업인·농촌 주민 참여와 책임 하의 농촌개발·농촌자산 관리 체계 확립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 선	㉜ “농안법” 전면 개정 및 “(가칭)도매시장법” 제정					
	㉝ 농축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제도 정비	△				○
	㉞ 생산자 중심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 조직화·규모화 추진					
	㉟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강화					
	㊱ 품목별 전국 단위 마케팅보드 구축을 위한 의무자조금 활성화	○			○	○
	㊲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㊳ 농업과 식품산업 부문 기업과의 상생협력(연계) 강화					
	㊴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㊵ 국산 농축수산물·농식품을 적용 예외로 하는 "청탁금지법"개정		○	△	○	
국민의 먹거리인 농식품의 안보와 안전 체계 확립	㊶ "식품안전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	○	○	○	○	○
	㊷ GMO(유전자조작농산물) 완전표시제 도입·실시	○		△		○
	㊸ 휴대 농산물 면세 허용총량, 품목별 한도 감축을 위한 "관세법" 개정					
	㊹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핵심 곡물(식용,사료용) 자급률 제고	○		○	△	○
	㊺ 논농업 생산구조의 중장기적 개편을 목표로 "쌀 생산조정제" 도입·실시	○	○	○	○	

10대 농정비전	60대 핵심 요구사항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국민의 당	바른 정당	정의당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구조의 확립 방안	㊻ 농업용 시설(RPC, LPC 등)에 대해 농사용 전기 요금 체계 적용	○				
	㊼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공급체계 개선					
	㊽ 농업·농촌 분야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㊾ 농기자재의 품질 향상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				△	
	㊿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			
	51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를 위한 관리·추진체계 정비	○	○	△	○	
	52 사료(조사료) 자급률 제고, 환경보전형 축산 활성화 방안 마련					
7천만 민족이 주인 되는 "국민농업" "통일농업"구축	53 초·중·고교생 및 일반 시민 대상 농업·농촌 교육 및 식생활교육 강화	○		○		
	54 취약 계층 식품보조 지원 정책 내실화	○				
	55 도시 소비자와 농업인 간 협력·교류 활동 지원 강화		△			
	56 민·관 차원의 남북 농업협력 복원(식량·농자재 지원, 기술·유전자원 교류 확대)	△				○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정추진체계 개편 방안	57 농업·농촌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					
	58 자율·창의·책임의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농정의 전면 혁신	○	△		○	○
	59 농업금융 시스템을 시장지향형·수요자 중심 체제로 개편					
	60 현장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 분야 연구·개발(R&D) 체계로 재편			△	△	

※ 본 자료는 토론회 당일 농정 책임자 토론, 대통령 후보 연설에서 공언한 내용과 함께, 4.19(수) 한국농식품정책학회와 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제19대 대선후보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각 당 농정공약과 최종적으로 발표한 각 당 농정공약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한농연의 농정공약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것임.